2008-29 |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08-29 |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김윤영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방법 ·····5
Ⅱ. 사이버투쟁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1. 개념 정의 ·····7
가. 사이버투쟁 ·····7
나. 사이버안보 ·····9
다. 사이버전사 ·····9
2. 사이버투쟁의 특성 ·····10
가. 비대면성과 익명성 ·····10
나. 신속성과 확산성 ·····11
다. 편리성 ·····12
3. 북한의 사이버 공작 부서 ·····13
가. 대남혁명 기구 ·····13
나. 사이버투쟁 기구 ·····16
다. 사이버 요원 양성 ·····18
Ⅲ.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양상 ·····21
1. 사이버투쟁을 위한 인터넷 정책 ·····21
가. 지도부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21

나. 인터넷 정책의 이중성 ·····23
2. 친북 인터넷 사이트 현황과 유형 ·····33
가. 친북 인터넷 사이트 현황 ·····33
나. 친북 인터넷 사이트 유형 ·····36
3. 대남 사이버투쟁의 시사점 ·····65
가. 대남 사이버투쟁의 유형 ·····65
나. 대남 사이버투쟁의 사회적 영향 ·····80
Ⅳ.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전망 및 대응책 ·····98
1. 전망 ·····98
2. 대책 ·····100
가. 기본 원칙 ·····100
나. 인권 및 법 차원의 대책 ·····101
다. 보안경찰 차원의 대책 ·····102
Ⅴ. 결 론 ·····111
【참고 문헌】 ·····116

표 목차

<표 2-1> 재편성된 대남 사이버투쟁 기구 ……17
<표 3-1> 경제부문에서의 주요 웹 사이트 개설 현황 ……24
<표 3-2> 인터넷 개방 관련 주요사업 추진 현황 ……25
<표 3-3> 광명에 연결된 주요 웹사이트 ……28
<표 3-4> 광명의 개발 과정 ……28
<표 3-5> 인트라넷 광명의 특성 ……30
<표 3-6> 광명의 주요 서비스 내용 ……31
<표 3-7> 주요 친북 인터넷 사이트 ……34
<표 3-8> 통일여명 조회 수 ……52
<표 3-9> 통일여명 1주년 단행본 조회수 ……53
<표 3-10> 자주·민주·통일 및 체제 선전 내용 ……67
<표 3-11> ‘우리의 주장’ 주요 내용(2008년 7월 3일 현재) ……68
<표 3-12> 친북 해외사이트 투쟁구호 ……79
<표 3-13> 경찰청 친북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권고) 현황 ……89
<표 3-14> 친북 사이트 규제 관련 일지 ……92
<표 3-15> 2004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따른 성명서 발표 현황 ……96

그림 목차

<그림 3-1> ‘구국의 소리’ 방송 내용 ·····40
<그림 3-2> 구국전선 사이트 ·····41
<그림 3-3> 우리민족끼리 사이트(2008.6.20 현재) ·····42
<그림 3-4> 게임 ‘도적잡기 ·····43
<그림 3-5> 백두넷 사이트 ·····44
<그림 3-6> 범민련 남측본부 사이트 ·····46
<그림 3-7>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이트 ·····48
<그림 3-8> 민족통신 사이트 ·····49
<그림 3-9> 2003년 통일여명 자료 ·····51
<그림 3-10> 주체사상 사이트(2008.6.20) ·····54
<그림 3-11> 통일학연구소 사이트 ·····55
<그림 3-12> 우리민족강당 사이트 ·····56
<그림 3-13> 조선통신 사이트(2007.11.24 현재) ·····58
<그림 3-14> 조선신보 사이트(2008.6.18 현재) ·····59
<그림 3-15> 내나라 사이트 ·····60
<그림 3-16> 천리마 쇼핑몰 메인 ·····62
<그림 3-17> 천리마 상품 상세 페이지 ·····62
<그림 3-18> 코리아북센타 사이트 ·····63
<그림 3-19> 려명 인터넷 홈페이지 ·····64
<그림 3-20>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 ·····91
<그림 4-1> 보안수사 인력과 보안사범 검거 현황 ·····104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인터넷(Internet) 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언론매체(방송·신문 등)를 대체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는 1995년 말 36만 명에 이어서 1997년 말에는 100만 명을 넘었고 1999년 말에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1999년 6월부터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상반기까지 전체 인터넷 인구 3500백만 명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무려 1,506만명에 이르고 있다.[1)]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우리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광범위성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이용하는 부정적인 요인도 내재되어 있다.

북한은 '조선통신' 인터넷 사이트를 해외에 개설한 이후, "인터넷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의 「총」같은 무기이며, 인터넷은 극우 반통일 세력과의 투쟁공간"[2)]이라며 대남 사이버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이에 따라 '구국전선'과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다양한 대남 심리

* 김윤영: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문학박사)

1)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조선일보>, 2008년 8월 19일자.

2) 진보네트워크(http://www.jinbo.net), 참세상 게시판; 조인상, "북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정훈교육 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구성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제35호, 2004. 12, 86면 재인용.

3) 김정일은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을

전 사이트를 통해 연방제통일의 당위성, 주한미군철수, 보안법철폐, 대남비방, 반미반전, 친미극우보수세력 청산, 민족공조, 북핵 합리화, 선군정치 선전 및 김일성 부자 우상화 등의 대남 사이버투쟁을 무차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은 국내외 친북 추종세력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대남투쟁 선전 선동에 머물지 않고, 국가 기관망을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테러·대남공작·정보수집·간첩·해킹 등을 전개하는 등 사이버공간을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해방구'로 활용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민주혁명단'(1999) 사건,[4] '백두청년회'(2000) 사건,[5] '일심회 간첩사건'(2006)[6] 등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 200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일 장군님을 닮자"라는 '정풍운동'(整風運動)을 강조하자 한총련과 범청학련은 '정풍운동'은 "우리장군님(김정일)을 닮아 장군님의 통일을 앞당기는 운동"이라며 2006년을 정풍운동의[7] 해로 설정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정풍운동을 선전선동하며 주 10시간씩 사상학습 등의 '정풍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8] 그리고 지난해(2007.1.24 현재) 12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김일성 김일성과 김정일, 회고록, 선군정치를 비롯한 북한체제를 찬양한 문서가 3,009건이나 올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관한 연구는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정도로 인터넷에 많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4) 한국 내 정보를 수집한 후 암호화하여 인터넷 E-mail로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 정보당국에 보고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5) 2000년 4월 김일성 생일(4.15)과 관련하여 김일성을 찬양 선전하는 메일을 대량으로 올리다 적발된 사건이다.

6) 2006년 10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일심회라는 친북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7) 북한은 이미 2005년 12월 초 <반제민전>의 <구국전선> 사이트를 통해 '정풍운동'을 강조한 바 있다. 정풍운동은 1942~45년 중국공산당이 당원 일반을 대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육시키고 당내 기풍을 쇄신하기 위해 일으킨 운동을 의미한다.

8)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자유민주연구』 제2권 2호, 2007. 12, 36면 재인용.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단편적인 첩보나 정보에 근거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2000년 이후 북한 공산대학에서 전자계산기강좌(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김상명(2004) 등 북한의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하게 되면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 북한의 정보통신에 대한 실체가 조금씩 들어남에 따라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이러한 연구조차도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책을 제언하기 보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은 대남투쟁 노선을 정당화하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사이버 상의 '교양학습' 자료로 제공하고,[9] 원문 내용을 사이버공간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비전문가들이 아무런 방어기재 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 저의를 간파하기 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용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10]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 및 친북 해외단체의 친북사이트를 비롯하여 국내 자생적 친북사이트의 현황과 이들 사이트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대남 사이버투쟁의 행태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보안경찰의 대응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대남혁명 투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보안경찰의 실무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9) 김명혁, "2006 공동사설 학습"(<전국연합> 자료게시판 1236, http://www.nadrk.org/plus/board.php3?table=pds&query=view&l=2293&p=2&go=17), 2006.1.26일 검색. 이 공동사설의 학습자료 구성은 '2005년 평가, 공동사설 전문, 공동사설 해설, 반제민전 문헌, 반제민전 신년서한 해설과 체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운동권이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쉽게 주요 내용을 분류하여 해설하고 있다.

10) 김윤영, 『2006년 반제민전의 대남투쟁 노선 분석』(2006 책임연구과제), 2006, 치안정책연구소, 5면

2. 연구의 범위

북한은 정권 수립 후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고자 반정부세력과 좌익용공세력의 의식화와 조직화 그리고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즉,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위해서 간첩남파를 통한 지하당 구축과 동조세력 포섭, 국내 친북좌파권 지원과 투쟁선동, 상하층 통일전선 형성, 남한사회교란과 국론분열을 위한 대남심리전, 해외교포 공작과 친북반한단체 조직과 지원, 대남 테러·납치·파괴, 제한적인 군사도발 등 직간접적인 대남혁명 투쟁을 수행해 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발달을 적극 이용하여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이버테러, 사이버전, 사이버심리전 등 군사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보전과[11]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를[12]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북한과 국내 친북세력에 의한 사이버투쟁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에 있다.[13]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이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남 사이버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시기의 해외 및 국내 자생적 친북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투쟁을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11) 대표적인 연구로는 합동참모본부의 『최근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상』(합참심리전단, 2002), 김흥광의 "북한의 사이버정보 실태"(『북한』 2005년 5월호, 북한연구소)과 "북한의 사이버전 대응과 전략"(『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김학근의 "군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사이버전사 양성방안"(경희대석사논문, 2008) 등이 있다.

12) 대표적인 연구로는 선유정의 "김정일시대의 과학기술중시사상"(『북한과학기술연구』 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최현규 외의 "<특집> 북한정보통신 지식정보: 북한의 인터넷과 웹사이트"(『북한과학기술연구』 제3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등이 있다.

13)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동열의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자유민주연구』 제2월 2호, 2007), 조인상의 "북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정신전력연구』 제35호, 2004) 등이 있다.

3. 연구의 방법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북한과 친북해외단체 그리고 국내 자생적인 친북인터넷 사이트의 사이버투쟁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를 중요시 하는 '문헌접근 서술방법'과[14]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활동 행태를 분석하는 '행태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을 병행하여 대남 사이버투쟁에 은폐된 저의를 도출해 내는 한편,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원문 내용의 축출과 함께 세부적인 분석으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자료는 북한 발행 문건을 비롯하여 국내의 서적과 논문, 간행물, 유관기관 정책연구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자료, 시민단체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료 수집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 본 논문의 각 장에 대한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사이버투쟁 용어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부서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 등에 근거한 선행연구 자료들과 북한의 각종 원문자료 등 문헌적 접근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인터넷 정책과 친북 해외 사이트 및 국내 사이트 현황과 유형을 고찰한 후, 대남 사이버투쟁이 국내 사이버공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문헌적 접근방법과

---

14)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북한관련 연구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발전론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문헌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상완 외,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4쪽), 그리고 북한연구 방법으로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아카데미, 2003; 한영춘,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법문사, 1998; 김경동·이온죽,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1986, 30-308, 319-334쪽 등을 참조할 것.

함께 행태적 접근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제4장은 앞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남 사이버투쟁의 전망과 대응책을 제언할 것이다.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 평가한 후,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사이버투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 정의

가. 사이버투쟁

사이버투쟁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Cyber)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이버(Cyber)란 '키잡이' 즉, '타수'라는 뜻을 가진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공두뇌학'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이버 용어는 1948년 미국의 수학자인 워너(N. Warner)가 그의 저서 제목으로 최초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배의 키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어해야 하는 '키잡이'의 역할을 '자동제어장치'에 비유했다. 이후로 '인공두뇌학'이란 용어는 스스로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자동기계 관련 분야를 총칭하는 의미를 담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이런 목적수행적인 자동기계설계와 이러한 견지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을 총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기술이나 근대적 생리학 및 행동학 등은 '인공두뇌학'적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 가지 용어와 결합하여 복합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15]

사이버공간(Cyber Space)이란 용어는 1984년 발표한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공상과학 소설인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인터넷(World Wide Web) 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전자 공간 역시 또 하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16] 사이버공간의

15) 김학근, "군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사이버전사 양성방안", 경희대석사논문, 2008.2, 6면.
16) 이러한 공간개념들은 모두 장소적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이 외에도 사용자가 그러한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논리공간이 존재한다.

특성상 물리적 만남 없이 부여된 접속자 계정(ID)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의 인간은 현실적인 사회 위치나 신분(Identity)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만든 또 하나의 신분(Dual Identity)으로 익명성을 유지한 채 현실세계의 일상적인 일들을 영위하고 있다.[17]

사이버공간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고, 사이버이라는 용어는 사이버투쟁,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사이버 범죄, 사이버 강의, 사이버 머니 등과 접두어로 합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정보통신망(컴퓨터와 인터넷)[18]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네티즌(netizen)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공유하여 의사단체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의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공간'(Physical Space)이 아니라 '개념적 공간'으로 '컴퓨터가 생성하는 가상 이미지를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이버투쟁'은 어떤 국가나 조직(단체) 그리고 개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이슈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의 선전선동적인 글을 올려 네티즌으로 하여금 동조하거나 실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이버투쟁이란 북한 및 그 추종세력들이 한국사회의 사회주의를 위해 사이버공간을 통해 전개하는 모든 선전선동 활동을 총칭

17) 하옥현, "사이버공간 보안의 현황과 대응방향, 『정보보호학회지』 제13권 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10, 81면.

1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141호)은 사이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제2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하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 및 그 추종세력들이 자행하는 사이버투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다.[19]

나. 사이버안보

국가안보(국가안전보장의 약칭)를[20] 군사,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사회, 문화 등 군사 및 비군사적 분야에 대한 국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핵심적 가치를[21]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22]이라고 정의할 때, 사이버안보란 '사이버 상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국내외적인 국가적 위협 상황으로부터 국가의 목표와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응역량'이라할 수 있다. 사이버안보는 의도적이거나 우연한 사이버상의 국가적 위협상황을 모두 포함한다.[23]

다. 사이버전사

일반적으로 사이버전사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상대국의 첨단무기

19) 사이버범죄(cyber crime)란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칭을 의미한다(양근원·장윤식, 『사이버범죄 수사론』, 경찰대학, 2008, 3면). 사이버범죄는 통신망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 그리고 국가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20)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란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안보 외에도 테러, 국제범죄, 마약, 환경, 해적행위, 사이버테러, 산업스파이, 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군사적 안보와 군사적 안보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에서는 사이버 차원의 국가안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1) 핵심적 가치란 "해당국민이 수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국가의 필요와 합법적 욕구와 양립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상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계 구축방안: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국가전략』 봄·여름호, 세종연구소, 1997, 2면.

22) 이미정·한승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국방연구』 제48권 제2호,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 2005.12, 37면.

23) 사이버상에서는 악의적인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의도적인 것과 우연한 것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위의 글, 42면).

및 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상대국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을 때 국가정보체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이버 방어역량을 갖춘 전투원'[24]이라는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이버전사란 '사이버투쟁 및 사이버공격과 사이버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이버전투원'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2. 사이버투쟁의 특성

정보화시대의 주된 혼란은 전력시스템, 전사송금시스템, 전화망, 영공관리시스템과 같은 민감하지만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를 공격함으로써 야기되며, 그 결과는 종래 핵전쟁 등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 쉬운 접근성, 감시·감지·추적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파의 효과는 기존 핵전쟁시의 파괴력과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25]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투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 비대면성과 익명성

사이버투쟁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자의 신분 노출이 필요 없는 익명성과 함께 비대면성을 지닌다. 사이버공간은 현실과는 달리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접속자 아이디(ID)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행동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행해지는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의 국가안보 침해범죄 역시 범죄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을 악용해 대남 사이버투쟁을 자행하고 있다.[26]

---

24) 김학권, "군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사이버전사 양성방안", 14면.
25) 이미정·한승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43면.
26) 사이버투쟁의 실체를 식별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정보수집과 분석방법이 요구되었다. 전통적인 정보 수집·분석기법은 목표 대상의 지리적 위치와 역량이 비교적 분명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는 전혀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만들었고, 이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투쟁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계(boundary)가 불분명하다.[27] 전통적인 경계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는 국내의 법집행기관과 국가안보기관 및 첩보기관 사이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적대국은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전통적인 군사행위나 테러를 감행하는 대신에 개인이나 특정단체, 다국적 범죄조직 등을 이용한 사이버투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28]

따라서 사이버투쟁에 의한 국가안보 침해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암호 등으로 열람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국가안보 침해 죄의 입증을 어렵게 하여 사이버투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29]

나. 신속성과 확산성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 번의 클릭으로 국가, 단체, 개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특정정보(정치선전과 역선전 등)를 무제한적으로 신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 북한과 그 추종세력 역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대중의 대남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이끌어내

에 따라 새로운 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7)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과 개인의 경계, 근대민족국가 사이의 지리적, 정치적 경계 그리고 위협과 공격행위의 근원지 파악이 어려워지며, 자국의 정보체계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범죄행위에 의한 것인지, 전쟁행위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國防硏究』 제45권 제1호, 2002, 162면).

28) 이미정·한승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44면 참조.

29)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전투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과거처럼 지리적인 전선(戰線), 군과 민간 영역 사이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없고 애매하다. 적의 공격은 적 후방 깊숙이까지, 혹은 민간의 정보인프라를 대상으로 자유로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적의 공격이 국내에서 이뤄졌는지,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격인지를 구별해내기도 어렵다.

기 위해서 조작된 특정 정보를 네티즌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시켜 친북 및 반정부·반미 여론을 조작하는 사이버투쟁을 수행하고 있다.

다. 편리성

첫째, 인터넷 사용자는 컴퓨터와 유·무선 랜으로 연결하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사이버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송·수신자 쌍방이 실시간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이나 그 추종세력들은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신속하게 정보를 지시하고 보고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유통을 할 수 있어 정책담당자와 대중들의 인식을 쉽게 가공하여 조작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보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정부는 훨씬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도 다양한 이미지 조작과 속임수가 가능해 졌다.[30] 이러한 정보조작의 편리성을 이용하여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은 대남·대미 사이버투쟁을 통해 대중들의 반정부, 반미투쟁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의 다양한 기만형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투쟁 경우 저렴한 경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등 전통적인 무기기술의 경우 개발에서부터 전쟁을 수행까지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사이버투쟁의 경우 컴퓨터 전문가 등 정보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적 재정지원 등 큰 소요 경비 없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 즉, 컴퓨터망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사이버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30) 장노순, “합리적 억지이론의 한계: 정보전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집』 제41집 제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38면.

북한이 간첩을 남파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려면 엄청난 경비와 위험성이 따르지만, 사이버간첩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망에 접속하여 해킹을 통해 정보를 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사이버전은 천문학적인 경비를 투입하여 생산한 무기체제나 국가기관 산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31]

넷째, 사이버투쟁은 보안 유지를 하기 쉽다. 사이버투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터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 고유의 암호설정, 방화벽 설치, 폐쇄망(CUG; Closed User Group)[32] 등을 통해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투쟁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와 달리 범죄에 사용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사이버투쟁은 범인이 없는 제2, 3, 4의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국가안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33]

3. 북한의 사이버 공작 부서

가. 대남혁명 기구[34]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한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31)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38면.
32) CUG란 특정 단체의 정보교류 및 의사전달을 위한 서비스로서, 대개 CUG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승인된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CUG는 주로 자체 시스템과 전국적인 네트웍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 회사나 단체 및 동호회 등에서 이용하는게 보통인데, 대형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일정량의 공간을 할당받아 서비스하게 된다.
33)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활동들과 적의 정보전 공격을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고 시스템 및 평가방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즉, 누가 적인지, 언제 어떻게 공격이 이뤄지는지, 심지어는 지금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34)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北韓調査硏究』 제11권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78-98면

의 대남혁명 기구를 알아야 한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대남혁명 기구로 노동당 비서국(대남사업담당비서) 산하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 군 총참모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두고 있다.

첫째, 북한의 통일전선부(약칭 통전부)는 반정부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해외교포와 외국인 및 국내반정부 인사포섭활동, 대남심리전과 남북회담 주관 등 '남조선혁명'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전부는 햇볕정책을 역이용하기 위해 김정일에게 1998년경 조직 확대 제의서를 올려 사인을 받은 후, 종전에 1,500명 규모의 인원을 3,000명으로 증원하였다.[35] 이러한 조직 확대의 배경은 햇볕정책 역이용전략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만큼 여기에 필요한 통전부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북간 민간교류에서 남한은 민간인들이 방북하거나 교류하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통전부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자면 역사학, 문학, 수학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남한의 현실에 맞게 사이버침투를 위한 컴퓨터 인재들도 대거 편입시켜 인터넷을 통한 대남심리전을 감행(敢行)하고 있다.[36]

둘째, 대외연락부는 대남 공작원 밀봉교육과 남파간첩, 남한 내 지하당 구축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산하에 일본1과, 일본2과, 3과(해외과), 5과(국내과), 6과(교양· 훈련과), 7과(총련과), 총무과, 운수과, 변신(통신암호해독)과, 서기실 등을 두고 있다. 평양 용성구역에 위치한 112연락소(일명 봉화정치학원)는 대외연락부 공작원 자치 양성소이다. 이외에

35) 통전부는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조국통일연구원, 무역회사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남북회담과는 각종 남북회담 정책수립 및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해외담당과(6개)는 해외 친북반한교포단체를 지도육성 하는 한편, 민단와해(총련, 일본, 동남아, 미주, 구라파, 중국)를 주도하고 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대남심리전 및 대남 관계자료를 분석 처리를 담당한다. 무역회사로는 일본의 기치우회사와 56무역회사를 두고 있다.

36)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89면

홍콩의 남문무역회사와 와룡상사, 상명무역을 두고 있다.

셋째, 35호실은 공작원 우회침투 및 해외파견, 대남 정보수집과 해외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하에 지역담당과(3개),[37] 지원부서(7개),[38] 홍콩의 무역회사(스웰상사)를 두고 있다.

넷째, 작전부는 공작원의 기본교육과 육·해상 침투 그리고 복귀와 호송안내를 담당한다. 산하에 전투원을 양성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30연락소), 공작원의 침투·복귀와 호송안내 및 침투로 개척을 담당하는 6개 연락소가 있다.[39] 이외에 무역회사로 봉수무역총회사, 대동강기술합작회사(927연락소) 등이 있다.

다섯째, 군 총참모부 정찰국은 군사정찰, 정보수집, 간첩 남파 및 복귀안내, 대남군사관계 와해사업을 담당한다. 소속부서로는 군 해외 및 대남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설봉지도국, 전방지역 월북자 및 납북군인 세뇌교육 후 남파임무를 수행하는 907군부대, 군 총참모부 계열 공작원의 육상, 서해, 동해상 남파 및 복귀를 담당하는 1기지(육상침투), 2기지(남포해상특수부대), 3기지(448군부대)가 있다. 그리고 잠수함을 통해 군 총참모부 계열 간첩의 동해 남파와 복귀를 담당하는 22전대(3722군부대)와 군사정찰·정보수집, 요인납치 및 살해, 폭파 임무 등을 수행하는 정찰국 직속의 7개의 정찰대대[40]가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비로봉무역회사가 있다.

여섯째, 국가안전보위부의 대남 부분은 남북회담시 회담요원으로 위장

37) 지역담당과로는 1과(대남), 2과(중국·일본), 3과(미주·기타)가 있다.
38) 지원부서로는 104과(자금조달), 변신과, 자료분석실, 자료조사실, 정책지도과(공작원 검열·감찰), 교양과, 간부과가 있다.
39) 육상 2개, 해상 4개 연락소가 있다. 육상연락소는 개성(923) 연락소, 사리원(327)연락소가 있고, 해상연락소는 청진(320)연락소, 원산(313) 연락소, 남포(218)연락소, 해주(301) 연락소가 있다.
40) 1정찰대대, 24정찰대대, 57정찰대대, 66정찰대대, 67정찰대대, 71정찰대대, 72정찰대대 등이 있다.

하여 각종 정보 수집과 역용공작을 수행하고, 대내 부분은 반당·반혁명분자 및 간첩색출, 김정일 경호지원, 출입국 관리 및 요인 시찰을 수행한다. 산하에 대간첩수사, 대외방첩활동 및 역이용 공작을 수행하는 천여 명 규모의 반탐국이 있다.[41] 해외반탐국은 해외정보 수집 및 공작활동을 수행한다. 북남대화국은 남북대화, 남북교류 관련 감시와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 홍콩에 신흥무역회사를 운용하고 있다.

나. 사이버투쟁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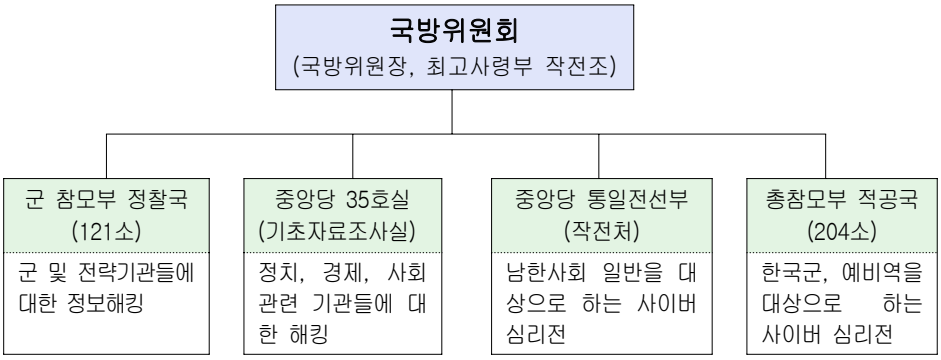
북한은 대남 사이버공작 부서는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담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조직 체계로는 정찰국 121소와 중앙당 35호실, 작전처, 적공국 204소[42] 등이 있고, 이들 조직을 통해 대남 사이버투쟁을 위한 심리전부대를 편성 운영하여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 심리전, 해킹, 전산망 무력화와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10월 국회 황진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육군 정보보호 종합발전계획'(2006.6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부대는 미 국방부의 모의시험 결과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 본토 전산망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하드웨어 기술력이 열악한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사이버전 공격기술 개발도 항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무력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동 보고서는 해커 부대 편제와 관련,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 '121소' 500여 명과 중앙당 조사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자동화국과 정찰국에서 전담을 맡

41) 산하에 동방민족진흥공사(312호실)를 운용하고 있다.
42) 인민무력부 산하에는 사이버전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원'과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평양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 팀제로 편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43]

<표 2-1> 재편성된 대남 사이버투쟁 기구



* 자료: 김흥광, "북한의 사이버정보 실태", 『북한』 2006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6, 138면.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기구와 주요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44]

첫째, 북한 군(軍) 참모부 정찰국 산하에 300여명의[45] 정예요원으로 조직된 '121소'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및 남한의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해킹을 주 임무로 하는 매우 전문화된 사이버공작 부서이다. 그리고 121소는 북한 당국이 중국(센양 등)에서 운영하는 호텔에서 머물며 해킹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한국과 미국의 전략기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전정보 수집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적공국 산하 204소 사이버심리부대는 100여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한국군을 대상으로 허위정보 및 역

43) "북한 '해커부대' 미 본토 전산망 위협", <조선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44) "체제 선전·해커부대… 北 사이버 무기로", <세계일보>, 2007년 2월 13일자; 김흥광의, "북한의 사이버정보 실태", 137-140면.
45) MBC TV 뉴스는 600명으로 밝히고 있다("북한 해커부대 운영", MBC(www.imnews.com), 2006년 10월 29일자).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염전사상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셋째, 통일전선부의 작전처는 50여명의 정예 요원을 배치하여 남한사회의 대학생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유출하고 여론흐름의 유인작전을 통해 친북세력의 기득권과 사회적 혼란 등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통일전선부(작전처)에 50여명의 컴퓨터 요원이 배치돼 남측 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중앙당 35호실 기초자료조사실은 50여명의 컴퓨터 정예요원을 배치하여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기관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해킹을 전담하는 사이버투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부대들이 해외에서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10여개의 공개적인 사이트를 비롯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북한의 직영사이트로 연결(수프핑)하게 하는 비공개 된 60여개의 심리전용 사이트들은 이러한 사이버심리전 부대들의 활동 결과이다.[46]

다. 사이버 요원 양성

북한은 과학기술의 자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여 왔다. IT인재 양성을 위해 김책공대 등 주요대학·연구소의 연구·교육체계 신설 및 개편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7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통해 김정일은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제기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47] 그런가하면 매년 신년공동사설

46) 김흥광, "북한의 사이버정보 실태", 137-138면.

을 통해 IT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IT기술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48]

북한은 1987년경 평양에 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과 김책공대를 설립한 후 예상되는 남북간 정보전에 대비하여 컴퓨터 및 정보전 전문가(장교)를 매년 100명씩 양성해 왔다. 북한은 평양방송(1999. 9. 25)을 통해 "인민군대의 정보전 능력은 그 어떤 원수들의 침략도 단호히 저지시킬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공개한 바 있다.

첫째, 북한은 인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들만을 모아 놓은 평양제1중학교에[49] 입학시켜 컴퓨터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후 대학에 진학시키거나[50] 중국유학을 보낸다.[51] 이러한 인원을 다시 컴퓨터 전문학원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시켜 최정예 요원을 양성한 후 사이버 공작기구(심리전부대)에 배치하고 있다. 결국 20대 전후의 컴퓨터 최정예 요원으로 사이버공작 기구를 운용할 수 있어 대남사이버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공작 기구에 배치되는 컴퓨터 요원들은 평상시 북한의 폐쇄된 '광명'을 통해 해킹과 심리전 등에 대한 충분한 가상훈련을 받은 후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은 주로 중국의 IP를 절취한 후 중국에

---

47)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따라 앞서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우는데서 기적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콤퓨터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것이 있으면 다 제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선집⑭』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96면).

48) 북한은 2002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나라의 융성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실력있는 첨단과학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9) 일반 중학교에서는 수학과목 시간에 컴퓨터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50)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평양기계대학 등 몇몇 대학에만 컴퓨터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51) 박진우, "체제 선전·해커부대… 北 '사이버 무기'로", <세계일보>, 2007년 2월 12일자.

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남 사이버공작 기구인 121소는 중국의 호텔 등에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해외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공개적 사이트들 외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북한의 직영사이트로 연결하는 비공개된 심리전용 사이트들을 은밀히 운용하고 있다.

넷째, 중학시절부터 해커요원으로 양성해 온 500여명의 사이버전사는 군부대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52] 북한 컴퓨터기술대학 교수 김상명(가명)의 진술에 따르면, 1995년부터 인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최고 영재 300명을 뽑아 평양금성1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증언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각종 소프트웨어와 첨단 컴퓨터 장비가 지원되며, 이들은 대부분 김책공대나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한 후 그 중 두각을 나타내는 소수의 인재만이 선발되어 전문적인 해커로 활동하고 있다.

52) 1999년 9월 29일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Ⅲ.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양상

1. 사이버투쟁을 위한 인터넷 정책

가. 지도부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김정일은 1991년 10월 28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정보수단들을 현대화하여 현대적 통신수단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검색체계를 세워 과학기술정보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하도록’[53]지시였다.

> “과학기술정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사업을 잘하여야 적은 밑천과 품을 들여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귀중한 자료들을 얻을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일군대렬을 능력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정보수단들을 현대화하며 현대적통신수단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검색체계를 세워 과학기술정보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를 종합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제때에 알려주는 과학통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김정일 선집 ⑿』,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15면).

> “전자공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기초하여 전자공학과 전자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전자계산기화, 로보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새로 개발한 극소형전자계산기에 쓰이는 전자요소와 전자재료들의 특성을 개선하고 자급률을 높이며 프로그람을 적극 개발하고 전자계산기의 리용분야를 넓혀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집적회로와 특수반도체소자 생산을 늘이

53)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김정일 선집 ⑿』,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15면.

고 고급전자일용품생산과 빛섬유통신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김정일, 위의 책, 200면).

미국 정보전 위력이 발휘되었던 걸프전(1991)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정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 지도부 역시 걸프전에서 미국이 최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해 승리하게 되자, 사이버전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휘자동화국(총참모부)과 전자전연구소(각 군단)를 신설하여 북한군의 지휘통신 방어와 적의 지휘통신을 공격할 수 있는 각종 전자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과 인도의 IT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54]

특히 김정일은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군 최고수뇌부를 모아 놓고 정보전쟁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전쟁은 알 전쟁, 기름 전쟁이었다면[55]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다. 즉 누가 평소에 적의 군사기술정보들을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장에서 적의 군사지휘정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어하고, 자기의 정보력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56]

---

54) 김정일은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군 최고수뇌부에게 "지금까지의 전쟁은 알 전쟁, 기름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다. 즉, 누가 평소에 적의 군사기술정보들을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장에서 적의 군사지휘정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어하고, 자기정보력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다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5)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시대 전쟁의 승부는 기름과 알"에서 결정된다는 관점을 갖고 미국과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2005.3.15)가 전했다. 알은 총탄 포탄 등을 가리킨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김정일은 1980년대 인민군 부대의 무장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도할 당시 "세계적 범위에서 전투용 차량의 도입 범위와 그 대수, 연유(기름) 사정에 관해 분석하고 현대전쟁은 기름전쟁이라고 특징지었다"는 것이다. 이어 "모든 전투기재와 설비, 인원이 기동수단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기름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기름없는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트는 김 위원장의 기름전쟁 정의가 "꼴룸부스의 닭알(콜럼버스의 달걀)이란 말처럼 일단 발견되면 누구에게나 자명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현대전을 기름전쟁으로 특징지으신 이 규정이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전략물자의 비축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 누구나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알전쟁에 대해 김정일은 "지난 시기에는 병기가 발전하지 못해 총포탄을 점발(點發)로 쏘았다면 지금은 있는 대로 연발(連發)사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누가 더 많은 탄약을 보장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전쟁은 알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연합뉴스, 2005년 3월 16일자).

56) 김흥광, "북한의 사이버정보 실태", 32면 재인용.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 군사지휘관들에 대한 첨단 정보기술 교육과 평양자동화대학(미림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사이버 전문부대를 조직하여 각종 정보전에 대응하는 한편, 주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언론, 기업 등 일반 기관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트라넷(intranet)인 '광명'과 군부, 정보기관(국가보위부), 경찰기관(국가보안성) 전용의 특수망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을 높였다.

나. 인터넷 정책의 이중성

1) 내외부망의 분리 정책

북한은 외부세계와의 정보유통을 억제하는 체제의 특성상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정책적으로 IT산업 육성과 생산·경영·기술 등을 배우고자, 정보화의 실리보장을 내세워 내적으로는 인트라넷 망을 구축하고 50여개의 기관·기업소가 개설한 홈페이지를 1,500여개의 인트라넷 연결망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인터넷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를 확대 운영하는 등의 인터넷 활용 기술을 축적해오고 있다.[57]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으로는 평양프로그램센터(PIC), 조선컴퓨터센터(KCC),[58]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은별컴퓨터기술무역센터 등이 있다.[59]

북한은 2003년 국가 식별도메인(kp)을 사용한 웹 사이트를개설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주소 배정국(IANA)에 등록하지 않아 국제 인터넷망과

57) 2003년 9월 19일 북한 무역성 부상은 "국제 인터넷과의 접속은 정치적·경제적 관계로 「광대역」 시스템(차단기술) 개발이후 접속시킬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58) 「조선컴퓨터센터(KCC)」는 '90. 10. 24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북한 정보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3개총국(개발, 대외, 행정) 산하에 내나라정보센터 등 10개의 연구개발센터 및 각 도에 정보센터, 정보기술대학, 강습소 등을 두고 2천여명의 종사자가 S/W개발·판매·품질감독·기술보급 및 IT관련 대외협력사업과 인재양성에 주력해 오고 있다.

59) "북한의 컴퓨터개발 실태", 「주간 북한동향」 제448호, 통일부, 1999년 8월.

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2월 16일 김정일 62회 생일을 기해 'KCC유럽'(독일업체)이 조선컴퓨터센터(KCC)와 외국공관·국제기구 평양 사무실 등에 위성을 이용한 외부 전자메일 유료 접속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60]

북한의 인터넷 국제망 연결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광케이블에 의한 전면적 개방이 아니라 제한된 이메일 교환수준으로 필터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다.[61] 그러나 경제적 수익 제고를 위해 중국·일본 등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체제선전·상업용 웹 사이트를 개설하기 시작한 후, 최근에는 경제적 수익을 위한 전자상거래·관광홍보용 웹 사이트를 증설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표 3-1> 경제부문에서의 주요 웹 사이트 개설 현황

사이트명	개설일	주 요 내 용	서버
조선인포뱅크 dprkorea.com	'99.10.	경협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글·영어·일본어·중국어로 구성된 사이트	중국
평양타임즈 times.dprkorea.com	'00.7.	경제부문 상업용 홍보 영문 사이트	중국
실리은행 silibank.com	'01.9.	경제부문 상업용(전자우편 중계 등)사이트로 한글·영어·일본어·중국어로 구성	중국
조선관광 dprknta.com	'02.1.	상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이트로 영어·일본어 로 구성	일본
조선무역 dprkorea-trade.com	'02.12.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오스트리아
천리마그룹 cholima-group.com	'03.2.	외국인을 위한 상업 무역용 영문 사이트	스위스
조선우호협회 korea-dpr.com	'03.7.	북한상품 판매를 위한 중국어 사이트	중국
평양국제정보센터 pic-international.com	'03.11	평양정보센터(PIC)가 생산하는 S/W판매 전문 국제 웹 사이트	싱가포르

* 자료: "정보통신망(인터넷) 추진 동향", 주간 "북한동향" 제686호, 통일부, 2004년 3월 18일.

60) 러시아 Itar Tass통신의 평양 특파원(Stanislav Barivoda)은 2004년 4월 13일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은 정말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의 외부인터넷 접속 상황과 운영실태를 취재 보도하였다(「주간 북한동향」 제691호, 통일부, 2004년 4월 3일자).

61) "북한의 인터넷 가입비", <동아일보>, 2004년 2월 18일.

<표 3-2> 인터넷 개방 관련 주요사업 추진 현황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7년초	최초의 웹 사이트 조선중앙통신(kcna.co.jp) 개설	일본
'99.10.10	최초의 상업용 웹 사이트 조선인포뱅크(dprkorea.com) 개설	중 국
'01.5.31	내부 인트라넷(INTRANET) 일부 북한 지역에 개설 운영	100여 기관
'01.10.8	국제 E-mail중계용 웹 사이트 실리은행(silibank.com) 개설	중 국
'02.10.5	내부 인트라넷 북한 전역으로 연결망 구축 완료	1,300여 기관
'03.1.7	독일[KCC유럽]과 상업 인터넷 추진 계약	100만유로
'03.7.13	국가 식별도메인 kp를 사용한 사이트(과학기술전시관) 개설	인트라넷
'03.9.19	차단기술 개발 이후 국제 인터넷망과의 연결 계획 표명	
'03.10.1	광케이블망 북한 전역에 시·군 지역까지 구축 완료	200여 시군
'04.2.16	KCC유럽-KCC간 위성을 이용한 국제 전용통신망 개설 - E-mail 및 외부 인터넷 검색 기능	

* 자료: “최근 북한의 인터넷 운영 실태 보도”, 주간 “북한동향” 제691호, 통일부, 2004년 4월 3일자.

위의 <표 3-2>에서와 같이 북한의 인터넷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인터넷 활용은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등 외국의 인터넷 서버를 활용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과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조선통신’, ‘조선신보’, ‘평양타임즈’, ‘조선인포뱅크’, ‘실리은행’, ‘구국전선’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특히 ‘구국전선’ 사이트는 국내 친북운동권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대남 사이버투쟁의 산실이 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외부세계의 정보유입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내부 접근만 가능한 인트라넷[62] 형식의 컴퓨터 네트워크인 '광명' 망을 설치하여 공공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운용함으로써, 외부세계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북한 내부에 구축된 '광명'을 "국제 컴퓨터망 즉, 인터넷과는 잇닿아 있지" 않은 "국가범위의 거대한 인트라넷"[63]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인터넷 정책은 외국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해외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체제선전과 상업적 목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대외지향적' 자원으로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한 활용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인 인트라넷 개념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기관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트라넷은 '대내지향적' 자원으로 정부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활용수단이 되고 있다.[64]

결국 북한은 현실세계에서와 같이 사이버공간도 지배하여 중국·일본 등 외국의 서버를 통해 체제선전과 경제적 수익 제고를 위한 상업용 웹사이트 개설하는 한편, 일인독재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세계와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인터넷 정책은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외부(인터넷)와 내부(인트라넷)를 분리시켜 운용하는 이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62) 인트라넷(intranet)은 기업이 내부의 정보 교환과 공동 작업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축한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한다.

63) <조선신보>, 2003년 3월 1일자.

64)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30-233면; 이희진·장승권·고경민, "외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정보통신 발전전략: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전략,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인터넷 전략",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2004, 214면.

2) 인트라넷 운영 실태

가) 인트라넷 광명

(1) 현황

북한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내부 인트라넷을 개발하여 북한 전역에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계기로 평양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인트라넷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공장과 기업소간 생산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범 운영해 오다가 2002년 11월 북한전역에 연결망을 완료하여 내각·학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활용해 오고 있다. 2003년 10월 19일자 노동신문은 일부 주요 간부가정에도 인트라넷을 연결한 것으로 선전한 바 있다.[65]

북한의 유일한 포털사이트인 인트라넷 '광명'은 국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다.[66] 광명은 1997년 6월경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설치한 과학기술자료 원격 검색시스템이다. 광명에 기초한 광역 전산망에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김일성종합대학·인민대학습당·내각·중앙기관 등 기관망과 각 도 지역 중심망, 각지 과학연구 기관·대학·공장·기업소들의 개별적인 컴퓨터들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광명이 광역전산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과학기술자료 검색을 비롯하여 전자우편(혜성), 파일전송(자료셈), 전자소식(별무리), 현대과학기술용어(7개 국어) 등과 자체의 웹브라우저, 이메일 프로그램, 뉴스그룹, 검색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67]

---

65) 고민경·이희진·장승권, "북한의 IT 딜레마의 이중전략: 인터넷 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4권 제4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년 겨울호, 147면.

66) 탈북자 김흥광씨(2007. 2. 12)는 "북한은 1998년 자체 기술로 인트라넷(내부 망)인 '광명'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 망을 통해 자료 전달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표 3-3> 광명에 연결된 주요 웹사이트

기관	연구소	공장·기업소
· 국가안전보위부 · 인민보안성(경찰청) · 사회문화부 · 노동당 중앙위원회 · 체신성 · 무역성	· 조선컴퓨터센터 · 중앙위성통신국 · 김일성종합대학 · 조선과학원 · 과학기술통보사 · 농업과학원 · 발명국 · 평양정보센터 · 6.26기술봉사소 · 인민대학습당	· 조선 8.28 무역회사 ·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 서경무역회사 · 령봉합작회사(융훈분회사) · 조선대흥연유 및 륜전합영회사 · 조선평원무역회사 · 조선만경석암무역회사

* 자료: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커뮤니게이션북스, 2003, 115-177면.

<표 3-4> 광명의 개발 과정

연도	내용
1992	VAX/VMS상에서 자료 검색 체계 CSTII개발
1996	윈도우 환경에서 자료 검색 체계 <광명> 제1판 출현
1997-1999	ISAPI, Java 기술에 기초한 웹 대응, <광명> 제2, 3, 4, 5판 출현. 국가적인 컴퓨터망에 도입하고 과학 기술자료 검색 서비스 진행
2000	문헌 정보 검색기술에 RDBMS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자료기지 관리체계 <광명> 제6판 개발 시작
2001-2003	응용체계 개발에 광범위 이용, 과학기술 검색 체계의 개발과 웹 대응

* 자료: 윤요셉, "데이터베이스관리체계 '광명'에 대한 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3, 22면.

그리고 광명은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김일성 종합대학 및 평양정보센타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 1,300여 기관 및 기업소에서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자료기지(DB)와 여러 국부망들의 과학기술자

67) "과학기술 컴퓨터망 '광명' 급속 보급확대", 「주간 북한동향」 제524호, 통일부, 2001년 1월 31일자.

료들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신문 방송 사이트에도 링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게임과 교육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광명은 기본적으로 “조선어의 특성”과 북한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있으며 “WWW 기술과 자체의 자료기지엔진기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터네트와의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광명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OS(operation system) 환경은 윈도우 2000이고 20여대의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들을 갖추고 24시간 가동하고 있다.[68]

(2) 특징

최근 기존 광명망의 한계를[69] 보완하고자 초고속통신망 광명을 새로 구축하였는데,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70]

첫째, 북한은 2003년 10월부터 광명의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시·군 소재지까지 광케이블망을 구축하였다.[71] 2002년 평양부터 시작된 초고속망 부설공사를 2004년까지 평양 시내를 완료한데 이어서 동해안의 함흥(250㎞)을 비롯하여 청진권역까지 확장(2005년 7월경)하고, 서해안의 신의주 영역까지 부설공사를 완료하였다.

---

68) 권재정, “과학기술정보통사체계 광명”, 제42차 재일본 조선인과학기술협회 학술보고회 및 통일과학기술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2. 10월 5-6일; 고민경·이희진·장승권, “북한의 IT 딜레마의 이중전략: 인터넷 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147쪽 재인용.

69) 기존의 광명은 디지털 전화망 목적으로 광케이블에 모뎀결합방식의 인트라넷 구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첫째, 데이터 전송속도가 매우 느리고 트래픽이 증가할 때 중앙에 있는 ‘광명’ 서버가 빈발하게 다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둘째, 광케이블의 기술적 상태가 좋지 않고 네트워크의 전 구간에서 부설된 신호증폭 시설들이 기능상 불량한 개소가 많아 서버-클라이언트(client)의 접속이 자주 끊기고 정보의 부분적인 유실이 자주 발행했다. 셋째, 라우터, 네임서버와 같은 필요설비들의 부재로 인하여 사이트들을 IP주소로만 직접 지정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스타형의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로 평양과 같은 중심부의 사이트들에서의 업로드(upload), 다운로드 속도는 정상 유지되는 편이지만 지방에서는 대체로 수십 kbps 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다섯째, 연결 케이블의 상태 불량을 포함해 네트워크의 정보전송 품질이 저조한 편이다.

70) 김흥광, “인터넷개방을 위한 북한의 로드맵과 추진현황”, 『북한과학기술연구』 제5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117-181면 재정리.

71) “2003년도 IT부문 성과”, 「주간 북한동향」 제675호, 통일부, 2003년 12월 26일자.

둘째, 데이터 전송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종전의 모뎀접속방식 대신 LAN카드 방식의 고속데이터 전송방식을 채택하여 광명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72]

셋째, 2007년까지 계획된 초고속망 부설공사는 사실상 백본(backbone)[73]으로 간선망과 최종 연결선까지 종래의 전화선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부설했다.

넷째, 새로 부설한 평양시의 광명 인트라넷의 데이트 전송속도는 대체로 70-80(최대 100)Mbps로 측정되고 있으며, 함흥 등 지방에서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10Mbps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5> 인트라넷 광명의 특성

구분	특징	비고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	TCP/IP, IEEE822.3	국제적인 인터넷 접속과 활용 가능
단말기 접속방법	모뎀접속, 전화선 겸용	2004년 이후 전용 광케이블과 랜카드방식으로 성능 업그레이드
데이터 전송속도	평양: 1Mbps(최고) 지방: 30Kbps(최소)	2004년 이후 10Mbps로 성능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구조	중심점을 가진 방사형망	평양을 중심으로 각 도, 시, 군에 방사형 네트워크 연결
도메인 주소 지정방식	IP주소 실제 주소만 사용	예>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00.100.150.100'으로 지정
이용자 수	약 5만(80%가 기관 및 단체)	전체 가입자의 60%가 평양
서비스 내용	데이터베이스검색, 전자우편, 전자소식, 웹사이트 검색, 전자도서관, 실시간 대화, 전자상거래, 오락센터 등	광명의 기본 구축 목적은 중앙의 과학기술정보 DB 온라인서비스. 그 외는 부수적 기능.

* 자료: 김흥광, "인터넷개방을 위한 북한의 로드맵과 추진현황", 117면.

72) 2006년에는 고속정보도로를 구축하여 광명망의 인트라넷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73) 백본은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을 말한다.

<표 3-6> 광명의 주요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데이터베이스 검색	· 광명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CIAST가 북한의 중앙과학기술정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장 역정을 두고 있음. · 정보검색은 웹상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서도 가능 · 전통적인 논리연산에 의한 검색과 함께 전후방 일치검색, 문자열검색, 개념검색에 의해 검색 가능 · 다국어 검색이 가능
전자소식	· 광명의 전자게시판 및 인터넷 카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임. · 120여개의 주제가 설정되어 있고, 각종기술자료, 건강상식, 문학작품 등까지 다양하게 올려지고 있어 인기가 높다함. · S/W를 개발한 각급 기관들이 그 내용을 홍보하고 보급하는데도 활용
웹사이트 검색	· 북한의 컴퓨터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웹사이트 및 웹문서들을 검색하여 질문식에 의해 찾을 수 있도록 한 것.
전자도서관	·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발간하는 '새기술소식', '콤퓨터와 그로그람 기술', '정보과학과 기술', '과학의 세계' 등 잡지류 뿐만 아니라 · 국내외 최신 잡지, IT 학습자료, 생활상식 등 여러 분야의 자료들을 Html 문서, Psf 파일, Word 문서 등의 형태로 온라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하고 있음.
실시간 대화	· 대화방의 기능으로 이용자들 간의 채팅을 할 수 있음 · 대화 1실, 2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어 대화실이 있음 · 대화방을 통해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각종 전자형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오락센터	· 장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네트워크 경기로 활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접 경기에 참여하거나 구경하면 훈수를 할 수 있음

* 자료: 최현규, "북한의 과학기술정보 유통 구조",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13-19면 재정리.

(3) 이용 실태

북한 당국은 인트라넷 광명을 활용해 다양한 대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낮은 컴퓨터 보급률로 인하여 일반 주민들은 쉽게 접속할 수 없다. 광명 가입 사용자 수는 5만정도이며 이중 80%가 기관이나 단체이다. 가용자 중 60%가 평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컴퓨터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신설('99), 평양·함흥 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컴퓨터기술대학으로 개편, 전국 고등중학교 학생 '컴퓨터 프로그램 및 타자경연' 신설(2000.11.19~12.2), '전국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 신설(2000.11.20~11.24) 및 각 분야의 컴퓨터 S/W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고,[74] 컴퓨터는 암시장에서 300~500달러 정도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평양에 남측 PC방과 비슷한 '정보통신기술판매소'가 있지만 요금이 비싸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광명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당의 고위급 간부나 외화벌이 기관 근무자 또는 7·1 경제관리개선(2002) 조치 이후 많은 돈을 번 장사꾼 정도이다. 일반 주민들이 컴퓨터에 접속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인터넷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북한의 인터넷 정책은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완고한 편으로 "인터넷이 체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2005 북한 이탈주민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100명 중 2명 정도만이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75]

나) 특수망

21세기는 가상적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전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하여 왔다. 그 서전이 바로 1991년 걸프전이라면 그 확인은 1999년 코스보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전쟁 과정을 지켜 본 북한 지도부는 단일 네트워크만으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유사시 적의 항공 공격으로 파괴될 경우 지휘통신

74) "과학기술 컴퓨터망 '광명' 급속 보급확대", 「주간 북한동향」 제524호, 통일부, 2001년 1월 31일자.

75) 박진우, "체제 선전·해커부대… 北 '사이버 무기'로", <세계일보>, 2007년 2월 12일자 재인용.

망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여 복수 통신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은 포털사이트 광명 외에도 '붉은검'(국가보안성) '방패'(국가안전보위부)[76] '금별'(군) 등의 특수망을 재구축하여 평상시에는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군 등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비상시 광명 망이 파괴될 경우 예비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친북 인터넷 사이트 현황과 유형

가. 친북 인터넷 사이트 현황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외부세계와 인터넷을 시작한데 이어서 1996년 캐나다 현지에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 만세'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망을 통한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부자를 미화·찬양하는 사이버투쟁을 전개하였다[77] 이러한 사실이 국내언론에 보도되어 네티즌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북한은 1996년 6월 14일 중앙방송을 통해 동 홈페이지 개설을 즉각 보도하였다. 이후 북한은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크다는 인식하에 1996년 말부터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대적인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78]

특히 북한은 조선통신사가 1997년 1월 13일 공식적인 사이트 '조선

76) 2004년 2월 국가안전보위부 전용의 전자정보사업 시스템인 '방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용 광케이블을 새로 부설하여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77) 1996년 북한의 대홍수로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홍수 피해를 지원하자는 캠페인이 뉴욕타임스에 의해 전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붐을 일기 시작했다.
78) 1996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평양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통신'을[79] 개설한 후 꾸준히 체제선전과 대남혁명투쟁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주목해 왔다.[80] 1999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조선중앙 TV의 공식 사이트로 '조선인포뱅크'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대외 경제협력용이나 외화벌이 등 경제적 목적에까지 이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 20여개의 친북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81] 2007년 12월 21일 경제관련 사이트 '천리마'(www.dprk-economy.com)를 개설하기도 했다.

2008년 8월 22일 현재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는 76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일부 친북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북센터·○○조선음악·○○대학교·○○은행·○○바둑·○○관광 등의 위장용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82] 친북 해외 사이트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7> 주요 친북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명	인터넷 주소(URL)	운영주체	개설지	비고
구국전선	www.ndfsk.dyndns.org	한국민족민주전선	일본	• 대남비방선전, 한글 • 백두넷(주체일지) 연결
백두넷	www.baekdoonet.has.it		미국	
백두산	www.baekdoo.hyperboards.com		미국	
범민련	www.bommin.org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일본	• 서울, 평양, 도쿄
모악산	www.moaksan.net		일본	• 김정일 21세기 세계전략 • 김일성·김정일 노작
민족통신	www.minjok.com	민족통신 운영위원회	미국	• 한글, 영어 판

79) '조선통신'은 2002년까지 '조선중앙통신'이라는 홈페이지 이름을 사용했다.
80) 북한은 1997년 세계통신 기구에 공식가입을 하였다.
81) 합동참모본부, 『최근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상』, 합참심리전단, 20002, 11면; 조인상, "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정훈교육 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구성을 중심으로-", 86면 재인용.
82) 경찰청,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 "경찰청 관리 친북 사이트는 모두 76개", <조선일보>, 2008년 9월 23일자 재인용.

				• 민족논단, 민족성명서
범민련공동사무국	www.bommin.net		덴마크	
선군포럼	www.songun.phpbbweb.com		미국	
우리 민족끼리	www.uriminzokkri.com	silibank	중국	• 사상과 이념선전(한글) • 신문잡지 게재, 동영상 등
6.15실천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com		일본	
자주성	www.01.co.za/default.html	주체사상연구소 호주협회	남아공	• 김일성 김정일 찬양 • 주체사상 연구
조국평화통일협회(평통협)	www.jpth.net	조국평화통일협회	일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www.chongryon.com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일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www.korea-htr.com/chuo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일본	
조선신보	www.korea-np.co.jp	조선신보사(조총련 통신기관지)	일본	• 1997년 2월 14일 개설 • 한국어, 일본어, 영어
조선영화 시리즈	www.tangun.co.jp/movie		일본	• 북한의 각종 영화
조선 인포뱅크	www.dprkorea.com	범태평양 조선민족 경제개발 촉진협회	중국	• 1999년 10월 13일 개설 • 한·영·일·중국어
조선통신	www.kcna.co.jp	조선통신사(조총련통신보도기관	일본	• 1997년 1월 10일 개설 • 조선중앙통신 및 로동신문 기사 제공(한국어, 영어)
주체사상	www.cnet-ta.ne.jp/juche/defaulte.htm	국제주체사상연구소	일본	• 일·영·불·스페인어
코리아네트워크	www.wordcorea.net		일본	
평양 TIMES	www.times.dprkorea.com	범태평양 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일본	• 2000년 7월 8일 개설 • 북한동향 선전(영어)
통일학 연구소	www.onekorea.org	미주평화통일연구소	미국	• 조국통일문제(한글) • 미국의 한반도 정책
KFA	www.korea-dpr.com	조선친선협회	스페인	• 스페인 친북단체 홈페이지 (영어 등 5개 구어)
North Korean Tours	www.koryogroup.com	고려여행사	중국	• 북한관광 안내 및 선전(영어)
천리마	www.dprk-economy.com			• 2007.12.21 개설 • 북한경제정책, 무역 및 투자정보 • 김일성·김정일부자 우상화선전 및 통일정책

* 자료: 경찰청,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 <조선일보>, 2008년 9월 23일자 재인용.

나. 친북 인터넷 사이트 유형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친북 해외 및 국내 자생적 사이트를 대남혁명 선전선동 사이트, 사상 선전 사이트, 체제 선전 사이트, 상업용 사이트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대남혁명 선전선동 사이트

가) 구국전선(http://ndfsk.dyndns.org)[83]

'구국전선'은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의 홈페이지이다. 반제민전은 통일혁명당(1969.8.25 창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일명 민민전, 1985년 7월 27일 개칭)을 2005년 3월 23일 개칭한 것이다. 반제민전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통일전선사업부' 소속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의 성격을[84] 지니고 있다.[85]

북한의 대남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은 1967년 3월 15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송출을 시작했으며, 1969년 8월 25일 통일혁명당이 결성되자, 1970년 6월 1일 동 방송을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으로 개칭했다. 그 후 1985년 7월 27일 통일혁명당이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통합되자 1985년 8월 8일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한민전은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하여 대남투쟁 노선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활동을 전개해 왔다.[86]

---

83) 김윤영, 『2006년 반제민전의 대남투쟁 노선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06, 7-14면 재정리.

84) 국정원은 2004년 11월 라디오방송에서 인터넷으로 매체를 바꿔 김일성방송대학을 운영하는 '방송대학운영위'와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통전부에 속한 것으로 분석했다.

85) <애국전선>은 한민전을 "한국 민중을 주체로 하는 애국적 성격의 전위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덕원, "한민전의 기치는 우리의 열렬한 지향(주체의 총화)", 『애국전선』 1993.11, 민족해방애국전선, 1993, 118쪽).

86) 1985년 8월 8일 '통혁당 목소리방송'을 통하여 '통혁당 중앙위'가 1985년 7월 27일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음을 보도하고, 기존 당 강령과 규약도 한민전의 성격과

북한 당국은 2003년 7월 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87] 한민전은 동년 7월 29일자 안내방송을 통해서 대남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동년 8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88] 이어서 동년 7월 30일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서는 "8.1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을 중단하며, 남측에서도 상응하게 대북방송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89]고 요청하는 등[90] 대남정책에 있어 일정한 상징적인 변화를[91]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3년 8월 12일 한민전 평양지부 대표(조일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민전 중앙위가 8·15 광복절을 기해 조선중앙방송을 직접 중계하기로 결정하였다"[92]고 발표하는 등 '구국의 소리방송'을 대신하여 정규방송인 '조선중앙방송'으로 대체해 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동년 10월 '평양방송'은 "한민전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며, 자주, 민주, 통일 성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93] 한민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였다. 그리고 동 방송은 한민전 중앙위 명의로 출범선언문인 '한국민족자주선언'을 발표하며 한민전 10대강령을 공표하였다. 이어서 1985년 8월 8일자로 그동안 운영해 오던 대남흑색방송인 '통혁당 목소리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하였음을 보도하였다(<노동신문>, 1985년 8월 9일자).

87) 북한은 2003년 9~12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장관급회담에서 대북·대남 텔레비전방송 등 상대를 비방하는 모든 방송을 8월15일부터 동시에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88) <민민전 방송>, 2003년 7월 29일자.

89)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주간북한동향」 제654호(2003.7.25-7.31), 통일원(http://www.unikorea.go.kr), 2003. 18면.

90) 이에 대해 통일원은 "남한에 대한 국력의 열세로 더 이상 '남조선 혁명'과 같은 대남 심리전적 선동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문제와 관련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주간북한동향」 제654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91)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를 "상징적인 변화, 의미 있는 변화,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바라보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북한 주체사상 변경가능", <연합뉴스>, 2003.10.2)

92)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주간북한동향」 제656호(2003.8.8-8.14), 통일원, 2003.8.18.

93) 「주간북한주요동향일지」(2003.8.25-8.31), 국가정보원(http://www.allim.go.kr); 김승호, "북한 대중투쟁 분석"(『공안연구』 통권 제80집, 공안문제연구소, 2003.10), 37쪽에서 재인용.

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대남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구국의 소리방송> 중단 안내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각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으로 첫 걸음을 뗀 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나날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30여 년 간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진리의 전파자, 변혁의 타종봉, 민중의 대변자로써의 사명에 충실해왔습니다.

우리 구국의 소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출 명장상에 매혹되어 터치는 여러분의 환호성에 자기의 목소리를 합치고 자주민주통일의 광장으로 굽이쳐 가는 도도한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 아래 겨레가 하나될 6.15 통일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통일의 이정표 따라 바야흐로 남과 북 사이에는 화해와 단합의 새 장이 펼쳐지고 온 겨레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의 노래는 온 삼천리를 진감시키며 7천만 민족을 통일조국 창조에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슴 벅찬 격변기에 북측에서는 제 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오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체의 방송을 중지하자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측의 이 역사적 제의는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한시바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을 반영한 애국 애족적인 발기입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 편집국은 이북의 발기에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화답하여 우리 방송을 8월 1일부터 주동적으로 전면 중지하게 됨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민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방송, 2003.7.29

한민전은 '구국의 소리방송'을 중단한 가운데 2004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통하여 신년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남한 내 주요 사건이나 시기마다 대남투쟁 선전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김일성방송대학'[94] 강좌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2004.11.8)하여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당국은 2004년 11월 12일 친북 인터넷 사이트 32개[95]에

94) <김일성방송대학>은 1962년 <맑스-레닌주의 방송대학>으로 출발하여 1974년 4월 김일성 61회 생일을 기념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하였으며, 홈페이지는 <우리민족강당>(www.ournation-school.com)이다. 동 방송대학은 대학 진학을 못한 북한의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김일성부자의 혁명역사와 사회주의 우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 1년제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대남전용인 평양방송(방송시간은 23:00~04:00 단파)을 통해 친북추종세력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등 이념교육을 전담해 왔다.

대한 국내접촉을 차단하였는데, 이에 대해 친북 해외사이트 '민족통신'은 "민족반역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내외 네티즌들의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 항의 성명전, 국보법 철폐 순간까지 국보법 짓밟기 운동 전개" 등을 선동하였다. 특히 한민전은 인터넷 '구국전선' 등을 동원하여 차단 조치된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락시(proxy) 서버' 사용방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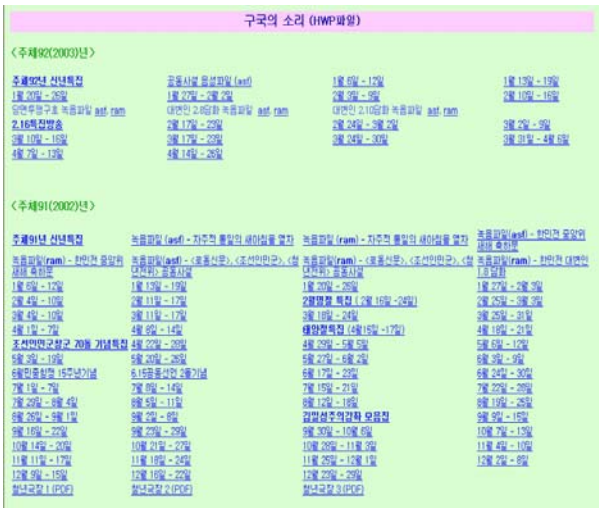
한민전은 2005년 2월 21일 국내접속이 차단된 홈페이지 '구국전선' 사이트를 기존의 도메인(http://ndfsk.dyndns.org) 및 IP주소와 다른 도메인(http://ndf-sk.dyndns.org) 및 IP주소로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여 국내 접속을 재개했다. 이 사이트는 기존의 사이트(http://ndfsk.dyndns.org)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주장', '자주·민주·통일의 광장', '절세의 위인상', '주체 사상학습실' 등의 코너를 두고, 한민전 대변인 논평과 담화,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 찬양, 북한체제의 우월성 및 선군정치 선전, 김정일 저작과 김일성 회고록 소개,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을 게재하고 있다. '구국의 소리'(http://ndfsk.dyndns.org/kuguk8/ku08.html)는 '구국전선' 사이트 내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구국의 소리방송을 편집하여 '구국의 소리(HWP)'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다.

한민전은 남한 정세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이던 가운데 2005년 3월

95) 당국에 의해 차단 조치된 32개 친북 사이트는 <구국전선>, <조총련>, <조선통신>, <조선신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선음악>, <민족시보>, <통일한마음>, <민족자주대학>, <모악산>, <겨레사랑터>, <코리아네트워크>, <조선대학교>, <백두넷>, <우리민족끼리>, <조선인포뱅크>, <민족통신>,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통일학연구소>, <조선의 노래>, <내나라>, <조선재독일동포협력회>, <호주동포민족대단결>, <조국통일21>, <코리아북센타>, <실리은행>, <조선우표>, <화려은행>, <조선출판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등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구국의 소리방송>, <방송대학운영위원회>, <구국전선>, <전단제작소> 등으로 이들 사이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에서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통일전선사업부 산하기구로 밝혀졌다.

96) '○○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등에는 네티즌들이 친북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3-1> '구국의 소리' 방송 내용


구국의 소리 (HWP파일)

(주체92(2003)년)

주체92년 신년특집 | 공동사설 음성파일 (asf) | 1월 6일 - 12일 | 1월 13일 - 19일
1월 20일 - 26일 | 1월 27일 - 2월 2일 | 2월 3일 - 9일 | 2월 10일 - 16일
김대중정권 2.16담화 녹음파일 asf, ram | 대변인 2.16담화 녹음파일 asf, ram | 대변인 2.16담화 녹음파일 asf, ram
2.16특집방송 | 2월 17일 - 23일 | 2월 24일 - 3월 2일 | 3월 2일 - 9일
3월 10일 - 16일 | 3월 17일 - 23일 | 3월 24일 - 30일 | 3월 31일 - 4월 6일
4월 7일 - 13일 | 4월 14일 - 20일

(주체91(2002)년)

주체91년 신년특집 | 녹음파일 (asf) - 자주적 통일의 새아침을 열자 | 녹음파일 (ram) - 자주적 통일의 새아침을 열자 | 녹음파일(asf) - 한민전 대변인 담화 육성본
녹음파일(ram) - 한민전 대변인 담화 육성본 | 녹음파일(asf) -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 대변인) 공동사설 | 녹음파일(ram) -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 대변인) 공동사설 | 녹음파일(ram) - 한민전 대변인 담화 육성본
1월 6일 - 12일 | 1월 13일 - 19일 | 1월 20일 - 26일 | 1월 27일 - 2월 2일
2월 4일 - 10일 | 2월 11일 - 17일 | 2월 18일 - 24일 | 2월 25일 - 3월 3일
3월 4일 - 10일 | 3월 11일 - 17일 | 3월 18일 - 24일 | 3월 25일 - 31일
4월 1일 - 7일 | 4월 8일 - 14일 | 대양절특집 (4월15일 - 17일) | 4월 18일 - 21일
조선인민군창군 70돐 기념특집 | 4월 22일 - 28일 | 4월 29일 - 5월 5일 | 5월 6일 - 12일
5월 3일 - 19일 | 5월 20일 - 26일 | 5월 27일 - 6월 2일 | 6월 3일 - 9일
6월민족대전 15주년기념 | 6.15통일선언 2돐기념 | 6월 17일 - 23일 | 6월 24일 - 30일
7월 1일 - 7일 | 7월 8일 - 14일 | 7월 15일 - 21일 | 7월 22일 - 28일
7월 29일 - 8월 4일 | 8월 5일 - 11일 | 8월 12일 - 18일 | 8월 19일 - 25일
8월 26일 - 9월 1일 | 9월 2일 - 8일 | 김일성주석강좌 모음집 | 9월 9일 - 15일
9월 16일 - 22일 | 9월 23일 - 29일 | 9월 30일 - 10월 6일 | 10월 7일 - 13일
10월 14일 - 20일 | 10월 21일 - 27일 | 10월 28일 - 11월 3일 | 11월 4일 - 10일
11월 11일 - 17일 | 11월 18일 - 24일 | 11월 25일 - 12월 1일 | 12월 2일 - 8일
12월 9일 - 15일 | 12월 16일 - 22일 | 12월 23일 - 29일
청년군장 1 (PDF) | 청년군장 2 (PDF) | 청년군장 3 (PDF)

23일 반제민전으로 개칭하였다. 한민전이 미국과 일본을 '반제'로 규정하여 반제민전으로 개칭한 것은 '우리민족 대(對)외세의 대결구도' 즉, '우리민족 대 미·일의 대결구도'를 부각시켜 '반제투쟁'(anti-imperialist struggle)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반제'의 '제'(제국주의)가 '미국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미일군사동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제민전과 그 추종세력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미제국주의의 종속적 동맹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반일투쟁'은 본질에서 '반미투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반제민전은 '반일투쟁'이 '반미투쟁'을 '대중화하는 가장 좋은 고리 중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반제민전으로 개칭한 것은 대남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중심 고리'를 '반제'(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두고, 선 미·일 제국주의 타도 후 남한혁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재 표명한 것으로 전술적 차원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97] 결국 반제민전의 최근 대남투쟁 노선은 지

97) 특히 한호석은 남북한의 '반제투쟁'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제국주의세력은 남(한국)의 반제투쟁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 하수인으로 기생하는 반동적 예속세력을 언제나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남(한국)의 반제투쟁은 그 투쟁이 제국주의체제를 타격하는 투쟁구호를 드는 경우라도 일단 예속정권과 기생자본에 맞서 싸우는 투쟁으로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북(조선)은 제국주의무력과 군사적으로 대치한 정전상태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직접 상대하는 공방전을 펴고 있다. 세계반제전선의 시각에서 볼 때, 북(조선)의 반제투쟁이 지닌 정치적 의미는 사회주의세력을 대표한 북(조선)과

속과 변화[98]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구국전선 사이트

반제민전의 홈페이지 구국전선은 일본 도쿄(東京)에 서버를 두고 있다.

구국전선 홈페이지로는 http://ndfsk.dyndns.org와 http://aindf.dyndns.org를 두고 있으며, 이메일은 ndfsk@celery.ocn.ne.jp와 aindf@celery.ocn.ne.jp가 있다.

결국 구국전선 사이트는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주체사상을 미화 찬양 선전하며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전술 전파와 각종 대남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의 행동강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남조선혁명'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북한은 2003년 정치, 사회, 문화, 관광부문을 비롯하여 각종 출판물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 '우리민족끼리'를 개설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노동당 대남담당 부서인 통일전선부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

제국주의세력을 대표한 미국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회, "정세변화의 특징과 진보정당의 길", 『이론과 실천』 2006년 1월호, 2006.1).

98) 2002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는 "노동당 산하 3대공작부서(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 중의 하나인 대외연락부가 올해 해체 됐으며, 강주일 대외연락부장도 재일 총련에 대한 지령과 관련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경질됐다. …(중략)… 대외연락부는 해외로 파견하는 공작원들에 대한 훈련과 재일 총련 및 한국 내 지하운동 감독임무를 띠고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05.4.23)되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조직체계'를 소개하면서 우리민족끼리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판단했다. '우리민족끼리'는 2003년 4월 한글판이 개설된 이후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을 통해 노동신문 주요 기사와 각종 동영상물 및 사진집 등은 물론 자체 논평도 게재하는 인터넷 매체로, 영어·러시아어·중국어 등 외국어판도 있다.[99]

홈 페이지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혁명일화와 주요 논문, 주체사상 이론, 통일관련 문서,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노동신문, 각종 잡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북한의 주요 명승지와 관광지, 영화, 음악, 요리 등도 컬러 사진으로 게재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운영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컴퓨터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자는 북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이트를 보기 위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네티즌들이 자연스럽게 친북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2007년 9월말 현재 우리 정부당국은 우리민족끼리를 포함한 친북 사이트 42개에 대해 국내 접촉을 차단한 바 있다.

<그림 3-3> 우리민족끼리 사이트(2008.6.20 현재)

북한 주장의 '우리민족끼리' 용어는 미국(외세)을 배제하겠다는 북한과 친북세력의 대남투쟁 선전 구호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 회담에서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99) "국정원 '우리민족끼리' 북 통전부 소속", <연합뉴스>, 2005년 4월 23일자.

하였다'(1항)고 합의한 이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여 왔다. 로동신문은 2006년 6월 사설에서 '(6·15 정상회담 이후) 지난 6년간은 온 삼천리 강토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나래쳤다'면서 '우리 겨레는 6·15 통일시대에 협력 교류도 우리 민족끼리, 반전평화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게임란을 신설한 후, 일본인과 미국인을 도둑으로 묘사한 플래시 게임 '도적잡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그림 3-4> 게임 '도적잡기

왼쪽 그림은 '도적잡기' 게임 중 17번째 단계로 나쁜 도적들이 금동이네 집으로 들어오다가 집안의 함정에 빠진 것을 가상하여 주인공인 금동이가 뚜껑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함정을 막는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00]

100) 총 24단계로 제작된 이 게임에서 일장기 머리띠를 두른 일본인이나 성조기 문양의 모자를 쓴 미국인이 함정에 빠진 도적들로 그려졌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끝낼 경우 '머리가 비상하군요'라는 칭찬 멘트가 나온다. 게임은 시작에 앞서 "금동이가 사는 집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온 나쁜 도적놈들이 함정에 빠졌다. 우리 모두 금동이를 도와서 나쁜 놈들을 없애버리자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게임은 웹사이트 오른쪽 하단에 마련된 별도의 게임코너를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어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5년 9월 손전화 게임(모바일 게임) '소년장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평양정보센터(PIC)가 아동영화 '소년장수'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 개발한 이 게임은 한 소년이 달밤에 칼을 들고 전진해 나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고, 앞에서 나타나는 늑대를 처치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황재훈, "北 웹사이트에 반일.반미 게임란 신설", <연합뉴스>, 2006년 6월 20일자).

다) 백두넷(www.baekdoonet.has.it)

미국에 서버를 두고 코리아네트워크[101]에서 운영하는 '백두넷'은 친북 사이트로 남한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실현, 진보개혁실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남한의 반미 운동단체나 진보단체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 사이트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연결되어 있다.

백두넷은 남조선혁명 및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 선동하는 친북 사이트임에 불구하고 동 사이트 관리자는 백두넷이 "이 땅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새 형의 포탈사이트"라며, "백두넷에는 참된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모여" 있다고 왜곡 선전하고 있다.

<그림 3-5> 백두넷 사이트

라) 범민련(http://www.bommin.net)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19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101) 배두넷 홈페이지에서 코리아네트워크는 조국의 자주와 통일, 그리고 남녘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애국적 언론단체로 주장하고 있다.

친북성향의 남북한 및 해외교포들이 연계하여 결성한 친북반한 통일운동 전선체로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배후 조종하고 있다. 범민련은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범민련이 결성된 것은 북과 남, 해외 통일애국 역량의 강고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102]고 호평했다. 평양방송(2005.11.20)은 범민련 결성 15주년을 맞아 "범민련은 애국통일운동조직"이라고 격찬하면서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해내의 모든 통일애국 역량은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뭉칠 수 있게 됐다"며 "북과 남 해외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통일운동이 하나의 조직적인 기반위에 더욱 활력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가 공유하고 있는데, 동 강령과 규약에는 통일론이 잘 나타나 있다. 1993년 12월 16일에 처음 공개된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북한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103] 사법부는 1989년 범민련 남측본부 추진위원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1997년 대법원은 범민련이 연방제통일 지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운다는 이유로 이적단체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범민련은 2001년 9월 18일 강령을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를 반영하고, 한국 내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로 확정된 상황에서 범민련의 합

102) 김일성, 1991년 신년사.

103) 범민련의 강령 1항은 북한의 통일3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2항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이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통일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1997년 8월 4일 김정일이 밝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 실현 주장을 수용하여 범민련의 통일방안으로 지지, 채택한 것이다.

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술적 차원에서 연방제통일 부분을 삭제하여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6월 24일 현재 범민련남측본부 사이트(http://tongil.jinbo.net) 원문 자료실을 보면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조국전선'의 "해내외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조국전선, 2008.6.24)을 비롯한 북한 '군사회담 대변인'의 "이명박 정권 규탄담화문 발표"(중앙통신, 2008.6.22) 등의 자료를 여과 없이 게재하고 있다.

<그림 3-6> 범민련 남측본부 사이트

마) 범청학련

1991년 8월 15일 평양시에서 열린 '청년학생 통일회담'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대표로 방북한 박성희·성용승이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장 이금철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맹'(祖國統一凡民族靑年學生聯合, 약칭 범청학련)조직 결성에 합의한 후, 1991년 11월 베를린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였다. 1992년 8월 15일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제3차 범민족대회를 통해 범청학련을 결성하였다.[104] 현재 북쪽 본부(조선학생위원회), 남쪽 본부(한국대학총

104) 1992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범청학련은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가 이들 청년학생들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의 동행사에 대해 원천봉쇄하자 북측본부와 해외본부는 판문점에서 남측본부는 서울대에서 각각 범청학련의 결성식을 공식 선포하였다.

학생회연합), 해외동포학생위원회(미국·유럽·일본 지부)의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의장,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해외동포청년학생대표 3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범청학련은 한반도의 민족분단 원인을 미국에 전가시키고 역대 남한정부를 부정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대남 혁명노선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로[105]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범민련'의 청년전위조직이다.[106] 범청학련은 강령에서 '범청학련을 강화하여 범민련의 대중적 기반을 다져나갈 것'과 '범민련의 선봉대로 투쟁할 것' 등을 주요 활동목표로 내세우고 있다.[107] 한총련은 1994년 4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총련이 범청학련의 남측본부로서 범청학련은 한총련의 상급조직으로 규정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2004년 4월 1일 기관지 『나팔수』를 통해 김정일을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000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으로 찬양하며 "김정일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2005년 3월 발행한 '일꾼교양지' 『청춘』을 통해서는 "조국통일운동이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맞물려 성취될 때 전체 민족 단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환수하게 될 것이다"[108]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1999년

105) 범청학련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유일한 전민족적인 청년학생 통일운동체"(유인물, "범청학련의 모든 것을 밝혀본다", 136면)임을 자처하고 있다.

106) 범청학련의 강령 전문에서 "미제에 의해 분단된 식민지 지배와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민족해방 투쟁"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07) 범청학련 강령 9조에서는 "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남과 북, 해외동포들을 포괄하는 유일한 애국적 통일운동체임을 인정하며 범민련의 선봉대로서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다.

108) "자주적 민주정권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수구보수 세력의 독재통치를 척결해 수립하는 정권이다. …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 조상 전래의 독자적 민족공동체를 재현하는 민족적 성업이다. 이 민족적 성업을 성취하는데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 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 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 … 이와 함께 조국

12월 20일 선고한 99도4027판결문에서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북한의 대남혁명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고, 또 범청학련이 북측본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남측본부는 북측본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림 3-7>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이트

2008년 6월 24일 현재 범청학련 남측본부(http://bchy.jinbo.net/) 사이트는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범청학련의 정책노선 등 반미·반정부를 선전·선동하는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료게시판을 검색하면 알 수 있는데, 동 게시판에는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조선신보’ 등의 기고문을 원문 그대로 올려 대남 사이버투쟁을 수행하고 있다.[109]

통일운동이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맞물려 성취될 때 전체 민족 단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환수하게 될 것이다(범청학련 남측본부, 『청춘』 2005년 3월호).

109) 2008년 6월 25일 현재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이트의 자료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결청산의 발걸음 6자회담 10.3합의리행 -상-> 다국간외교에 구현된 평화보장전략”(조선신보, 2008/06/27, 조회15), “조선과 미국 10.3합의에 따르는 동시행동조치”(조선신보, 2008/06/27, 조회14), “항시적으로 떠있는 전쟁의 불구름”(조선중앙통신, 2008/06/27, 조회7), “끝끝내 전쟁을 불러오려는 무분별한 책동”(우리민족끼리, 2008/06/27, 조회10),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해명”(우리민족끼리, 2008/06/27, 조회10), “조선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노동신문, 2008/06/27, 조회12), “전쟁방화자 미국의 정체를 고발한다”(민주조선, 2008/06/26, 조회19), “항시적으로 떠있는 전쟁의 불구름”(조선중앙통신, 2008/06/26, 조회10) 외 180여편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바) 민족통신(www.minjok.com)

민족통신(대표 노길남)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이다. 동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북한의 '자주적·민주적 통일'을 추구하는 인사들의 의견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인터넷 잡지(1999.5.1)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체사상, 김일성 혁명역사, 주한미군철수 및 미국반대, 반정부투쟁 등을 선전 선동하는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3-8> 민족통신 사이트

2008년 6월 23일 현재 동 사이트는 현 대통령을 '리○○ 역도', '괴뢰 대통령'으로 매도하여 비방하고 있는 북한 군사회담 대변인의 "이명박정권 규탄담화문 발표"(조선중앙통신) 내용을 여과 없이 수록하고 있는 등 친북 사이트로서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 통일여명(www.ndfsk.dyndns.org)

통일여명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전술을 국내 친북좌파세력에게 선전 전파했던 대북적인 친북반한 사이트였다. 동 사이트는 한총련 혁신파의 지하조직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110] 명의로 2000년 12월 7일 인터

110)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약칭 자민통위)는 한총련 혁신파를 지지하는 친북반한 전위세력으로써, 2000년 8월 5일 민족통신과 전국연합 등 국내운동권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등장한 이후 2000년 12월 이후에는 범민련·민주노동당 등의 홈페이지까지 이용하여 김일성부자의 위대성과 주체사상, 한민전의 불패성 등을 전파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부터는 '통일여명편집위원회' 명의로 『통일여명』, 『 사상전』 등을 발행했다. 또한 인터넷 '구국

넷 판 잡지 월간 '통일여명' 창간호를 발행했고, 2001년 5월 23일 6호부터 '통일여명편집국' 명의로 개칭하여 동 잡지를 발행하였다. 동 잡지는 2002년 12월 통권 24호까지 발행한 후 중단되었다. 2003년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 7호'(301-334호)를 마감으로 동 사이트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구국전선 사이트에서는 통일여명이 과거 발행했던 구국의 소리 녹취록, 한민전 문건, 선군정치, 주체사상, 대남혁명론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판 월간 '통일여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자료, 한민전, 통일전선, 로동신문, 평양방송, 조선로동당의 정책자료, 각종 주체사상자료 등의 방대한 자료를 편집하여 발행한 것으로 김정일과 노동당의 대변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통일여명'은 인터넷을 통해 전개했었던 대남 사이버투쟁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자평한 바 있다.

> "……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기관지를 지향하며 창간된 월간 ≪통일여명≫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였으며 새로운 인터넷선전의 전형을 창조하였습니다. 창간호부터 12호에 이르는 월간 ≪통일여명≫은 그 자체로 편집국동지들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이며 새로운 인터넷잡지의 전형으로 됩니다. …… 그간 동지들의 투쟁과 모범에 의하여 경애하는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과 영세불후의 주체사상,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인터넷 선전은 성공했다. …… 우리는 《통일여명》 편집국의 사상론과 주체의 혁명적 붓대중시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111]

2002년 한민전이 '신년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자 '통일여명 편집국'은 『2002년 총노선 관련 당문헌집』(2002.1.15)을 발행한 후, 동 문헌을 전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 친북반한세력들이 대남투쟁

전선'(http://www.ndfsk.dyn.to/)을 통해 북한의 대남투쟁 지침, 북한 체제 및 김일성, 김정일 찬양, 대남비방 등을 선전하고 있다. 현재 '구국 전선'에는 '구국의 소리', '통일여명', '애국의 길', '내나라', '백두산', '통일아리랑', '세기와 더불어','인터넷 백두산', '인터넷 회고록 강좌', '인터넷 당건설 투쟁' 등이 게재되어 있다.

111) "월간 ≪통일여명≫ 창간 한돌을 열렬히 축하합니다"(『통일여명 1주년』, 통일여명편집국, 2001년 12월),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2월 7일; http://www.kcna.co.jp, 2008년 6월 22일 검색.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112] 그리고 2002년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90일 동안 인터넷 '구국 전선' 사이트에 '통일아리랑'을 개설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노작과 회고록 및 일화, 김정일의 최근 동정, '자주·민주·통일' 투쟁 동정 등을 게재하면서, 아리랑 공연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아리랑 공연과 6.15공동선언, 한일월드컵 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전파했었다.[113]

<그림 3-9> 2003년 통일여명 자료

첫째, 아리랑공연 참가 및 각종 '통일축전성사'는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상·하층통일전선'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둘째, 아리랑 공연은 '민족성과 주체성을 구현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행사'인 반면에 한일월드컵은 '민족성과 주체성을 유린하며 분단을 심화시키는 행사'로 왜곡 선전하는 한편, 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주의체계가 와해된 불리한 조건에서 "민족주체역량을 극대화하며 통일혁명투쟁을 전개해 온 조선은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 민족적인 행사를 통해 민족단합과 통일지향을 추동"하고자 '민족대축전, 통일대축전'으로 아리랑 공연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2002년 12월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

112)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 문헌을 "《새해정국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아침을 열자》, 《2002년 정국진단》, 《한민전 대변이 1월 8일자 담화》 등은 《노동신문》등의 신년공동사설과 함께 우리 민족민주대오가 올해의 총노선을 수립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주요문헌"으로 규정하면서, "민족대오는 전위당의 방침을 옳게 접수하며 올해의 투쟁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선전선동한 바 있다.

113) 한민전, 2002년 6월 25일자.

안 『통일여명』 12권(총 7,488면)을 발행하여 총 9,015회의 조회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행본으로는 『사상전 1』을 비롯한 총 41권(총 26,522면)을 발행하여 네티즌들에 의한 조회가 14,542회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였다.[114]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분석한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115]

<표 3-8> 통일여명 조회 수

* 2001년 12월 5일 현재(인터넷 전국연합)

제목	발행일	면수	조회 수
창간호	2000.12.7	391	1,151
통일여명 2호	2001.1.27	431	717
통일여명 3호 2.16특집판	2001.2.22	268	943
통일여명 4호	2001.3.20	355	1,064
통일여명 5호 4.15태양절특간호	2001.4.23	740	790
통일여명 6호	2001.5.23	539	925
통일여명 7호	2001.6.21	479	936
통일여명 8호	2001.7.24	476	864
통일여명 9호	2001.9.4	1,039	426
통일여명 10호	2001.10.3	1,126	672
통일여명 11호	2001.11.1	718	400
통일여명 12호	2001.12.4	926	127
합계		7,488	9,015

114) 분할파일과 증보판, 출력용 파일은 제외하였다.
115) “통일여명 자료집 조회수”, 『통일여명 1주년』, 통일여명편집국, 2001년 12월, 533-540면.

<표 3-9> 통일여명 1주년 단행본 조회수

* 2001년 12월 5일 현재(인터넷 전국연합)

제목	발행일	면수	조회수	제목	발행일	면수	조회수
사상전 1	4.3	375	1,003	주한미군범죄	9.25	433	115
국가미사일방어체계	5.7	409	550	주한미군범죄와 여성	9.25	214	99
통일전선	6.9	1,282	1,265	한나라당	9.25	303	178
6.15공동선언	6.15	1,195	770	진보정당 관련 주요논문집	9.25	72	516
6.25전쟁	6.25	462	703	언론개혁	9.28	556	41
2001년 상반기 주요논문집	7.2	109	910	학원개혁	9.28	231	53
변혁적 사업방법	7.25	797	800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1	10.18	558	437
민중적 사업작풍	7.25	594	626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2	10.18	686	146
한국민족민주전선	731	460	846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3	10.18	869	77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요노작집	8.12	901	552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4	10.18	846	92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요노작집	8.12	903	911	조선노동당 1	10.18	603	229
반이회창	8.25	183	297	조선노동당 2	10.18	580	75
반 조선일보	8.25	429	201	조선노동당 3	10.18	547	66
반미자주	9.4	1929	418	조미공동코뮈니케	10.18	1,648	158
일본군국주의	9.4	1,780	108	6.15공동선언과 민족통일촉진운동	10.18	1,302	131
조국통일3대헌장	9.4	1,158	176	조러 모크스바선언	10.8	624	84
진보정당	9.4	384	492	브라질노동자당 관련논문	11.1	122	120
국가보안법	9.4	738	179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11.1	127	144
부쉬의 대북강경정책	9.10	580	143	≪인터넷 구국의 소리≫	11.1	225	172
반이회창2(주제별	9.10	214	199	≪한호석소장의 주요논문집≫	12.4	222	265
주한미군	9.25	872	195	**총 41권**		**26,522**	**14,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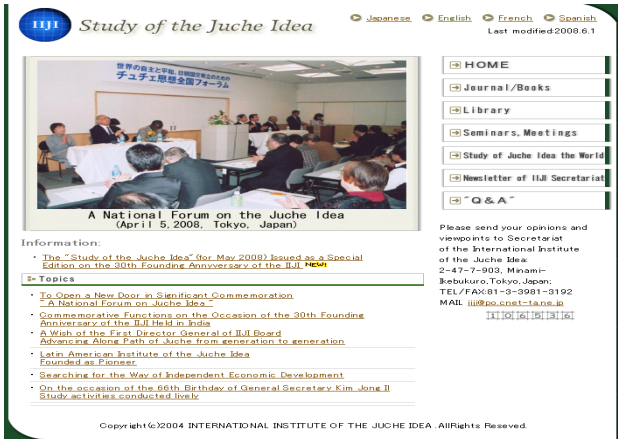
위에서 논의한 사이트 외에도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거나 동조하는 국내외 친북 사이트들이 수십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사회주의 학자나 운동권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론을 공유하고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생적인 사이트들이다.

2) 사상 선전 사이트

가) 주체사상(www.cnet-ta.ne.jp)

국제주체사상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판 사이트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을 소개 선전하고 있다. 동 사이트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관련된 '주체사상, 주체철학, 사회주의 성취를 위한 필수적 사상작업' 등의 글을 올려놓아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회의록을 볼 수 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Q&A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그림 3-10> 주체사상 사이트(2008.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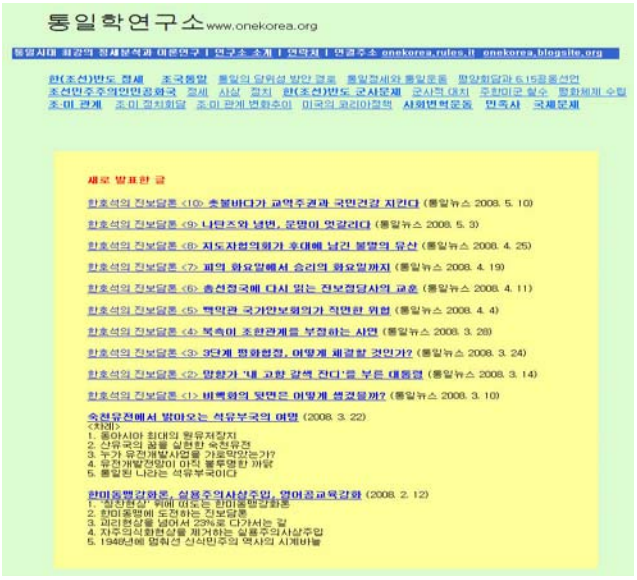


특히 1996년 광명사에서 발행한 주체사상 연구서 『김정일(Kim Jong Il)』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연구서는 '21세기 지도지침서'(The Lodestar of the 21st Century)로 선전되고 있다.

나) 통일학연구소(http://www.onekorea.org)

통일학연구소는 미국에 서버를 둔 친북인터넷 사이트이다. 김정일 어록 해석, 선군혁명 이론과 해설,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다루고 있다. 사이트 구성은 한(조선)반도 정세, 조국통일, 통일의 당위성 방안 경로, 통일정세와 통일운동,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한미군철수, 사회변혁운동 등으로 되어 있다. 동연구소의 소장인 한호석은 주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일이론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

<그림 3-11> 통일학연구소 사이트



다) 우리민족강당(www.ournation-school.com)[116]

'김일성방송대학'은 1962년 '맑스-레닌주의 방송대학'으로 출발한 후 1974년 4월 김일성 61회 생일을 기념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김일성방송대학은 대학 진학을 못한 북한의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김일성부자의 혁명역사와 사회주의 우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 1년제로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남전용인 평양방송(방송시간 23:00~04:00 단파)을 통해 친북추종세력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등 이념교육을 전담해

116) 김윤영, 『2006년 반제민전의 대남투쟁 노선 분석』, 9-10면.

왔다.

<그림 3-12> 우리민족강당 사이트

김일성방송대학은 인터넷 '우리민족강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2004.11.8)하였다. 인터넷 강의 과목은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혁명역사와 김일성·김정일의 노작, 김일성의 조국통일영도사,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사와 선군정치, 조선노동당 조국통일정책, 조선역사, 조선역사특강, 미일제국주의 조선침략사, 주체철학,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6월 24일 현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혁명력사 제19회"(한원경)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당사업과 중요정치행사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라는 글과 함께 '6.25 특강'(김성철)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령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있어 네티즌이 클릭만 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 도서실과 문답실 자료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2007년 "반제민전 대변인 1.25 논평"을 통해 '우리 민족강당'과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친북 인터넷홈페이지들에 대한 우리정부 당국의 접속 차단조치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화시대의 문명을 향유할 권리마저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쇼

적 폭거이며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반민족적 망동"[117]이라 비방하였다.

3) 체제 선전 사이트

가) 조선통신(http://www.knca.co.jp)

조선중앙통신사(朝鮮中央通信社, Korean Central News Agency)는 1946(1946.12.5)년 설립되었다. 이 통신사는 1946년 12월 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직속인 '북조선통신사'로 발족하였으나, 1948년 10월 12일 내각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현재 명칭으로 개칭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옥은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다. 러시아의 아타르타스, 중국의 신화사 등 46개 통신사와 보도 분야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간으로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러시아어통신, 프랑스어통신, 서반아어통신 등을 내보내고 있다. 외국통신을 수신하여 각 신문과 방송에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통신사 기능과 유사하지만, 정치· 외교· 행정· 경제 등 모든 뉴스에 관해 여타 신문이나 방송에서 독자적으로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만을 획일적으로 보도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모든 언론의 보도내용은 조선 중앙통신사의 간접적 통제 하에 있다. 이외에 노동당과 정부의 공식발표 등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대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편제상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과 같이 '남조선국'을 두고 있으며, 김일성의 지시로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4년에 룡천역 폭발 사고를 보도한 바 있다. 이 통신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통신사와 교류하고

117) 반제민전 대변인, "반제민전 대변인 1.25 논평", 반제민전 (http://ndfsk.dyndns.org/main.htm), 2007년 1월 25일 검색.

『조선중앙연감』과 『국제상식』을 출판하고 있으나, 『국제상식』은 1998년부터 출판이 중지되었다. 조선중앙연감은 1948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보도한 뉴스들을 모아 발행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본에 서버를 둔(1997) 인터넷 '조선통신'을 통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조선 인포뱅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북한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조선통신' 자료실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남북공동성명,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의 자료들과 과거 남북회담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공화국 헌법'이 장르별로 실려 있고, 노동신문 기사 전문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사이트는 노동신문에 실렸던 사회주의 해설, 재일조선인운동, 조선노동당의 위업,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 주체사상 해설, 김일성의 사회주의 운동사상 및 업적,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 등 과거 김일성·김정일 주요 어록과 주체사상에 관한 해설 등 김정일 체제를 선전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림 3-13> 조선통신 사이트(2007.11.24 현재)

나) 조선신보(http://www.korea-np.co.jp)

조선신보(朝鮮新報)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이다. 1945년 10월 10일 '민중신문'으로 창간해, 다음해 9월 제호를 '해방신문'으로 바꾸었다. 1948년 8월부터 주(週) 3회, 1949년 5월부터 격일간으로 발행하던 중, 1961년 1월부터 제호를 지금의 '조선신보'로[118] 바꾸고, 같은 해 9월부터 일간으로 발행하였다. 조총련의 "조선신보사"(朝鮮新報社)가 조선신보를 발행하고 있다.

기구는 편집국·경영국·총무실로 이루어져 있고, 편집국은 다시 동포생활부·정치부·문화부·기획부·사진부·편성교정부·인터넷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 조국'(북한)의 정치·경제 및 인민생활 소식, 남한 소식, 시사 해설, 조총련의 사업과 민족교육·문화·체육 소식, 경제경영 소식, 재일교포들의 생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집 방침은 사회주의 조국 옹호 및 재일교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 수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촉진,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이다. 자매지로는 '조선시보'(일문지), '민주조선', 'The People's Korea'(영문지)와 월간지 '조국' 등이 있다. 본사는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에 있고, 오사카(大阪)에 관서지사, 평양에 지국이 있다.

<그림 3-14> 조선신보 사이트(2008.6.18 현재)

인터넷 사이트 '조선신보'(http://www.korea-np.co.jp)는 1997년 일본에 개설한 조선신보사의 공식 사이트이다. 동 사이트는 주로 북한과 조

118) 그들은 제호를 "조선의 새로운 신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련의 뉴스를 전파하는 북한 관련 인터넷 신문이다. 북한과 평양 소식으로 김정일의 동향과 북한 체제를 자세히 소개하는 등 북한체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친북반한적인 담화나 논평을 통해 국내 친북반한 세력의 반미·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북한의 대남비방정책과 남조선혁명의 당위성을 선전하기도 한다.

다) 내나라(http://www.kcckp.net)

인터넷 '내나라'는 조선컴퓨터센타 산하에 개설된 포털 사이트다. 북한의 정치, 관광, 무역, 예술, 출판, 정보산업, 역사, 풍속 등에 관한 내용을 한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으로 싣고 있어 외국인들을 상대로 북한을 홍보 소개하는 성향의 사이트다.

<그림 3-15> 내나라 사이트

2008년 6월 23일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는 '특집,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소식, <내나라>의 최근 소식, 주제로 보는 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19] 특히 '주제로 보는 소식'란에서는 김정일의 혁명활동 소식과, 남조선,[120] 조국통일 등의 자료를 대량 수록하고 있다.

119) '특집'에서는 '남조선민심의 반영, 김정일주석과 선군,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소식'에서는 김정일의 현지지도 동향을 전하고 있다.

120) '남조선민심의 반영'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 대통령이 "《비핵, 개방, 3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에로 몰아갔다"고 비방하는 한편, 남한의 촛불시위를 전하며 현 정부가 '파멸'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내나라 역시 외국인을 상대로 북한을 홍보 소개하는 하는 한편, 대남 비방과 연방제통일 그리고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쉽게 접근할 경우, 북한의 주의 주장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4) 상업용 사이트

가) 천리마(www.dprk-economy.com)

북한은 2007년 12월 21일 경제홈페이지 '천리마'를[121] 개설했다. '천리마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홈페이지'라는 제목의 동 홈페이지는 다소 조잡하고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북한 정부 사이트들과는 달리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홈페이지 디자인도 나름대로 세련되었다. 북한 당국은 동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국제기구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는 일관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개별 기업들과 회사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널리 장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천리마는 투자가들에게 무역부문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 사이트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각각 제공되고 있으며, 새소식과 경제정보, 경제부문, 무역, 전자상점, 책방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부문은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수산, 전자 과학, 건설건재 등 5개 분야로 되어 있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30개 관련 기업이나 기관, 협동농장들을 소개하면서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자세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부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와 회사소개, 상품소개, 투자정보, 무역상담, 시장조사 등 6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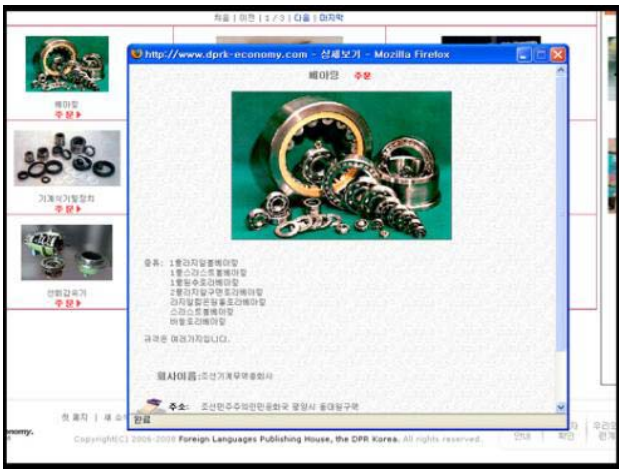
121) '천리마'(千里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천리마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이다. 천리마운동에서 이름을 따서 '천리마'라고 하였으며, 195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 통권 500호를 발행하였다.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천리마'가 500호가 발행된 것을 축하하며, 잡지 표지에 자기의 친필을 적었다고 한다.

<그림 3-16> 천리마 쇼핑몰 메인

구분되어 있다. 회사소개 페이지에는 무역과 관련된 회사와 기관 94개의 연락처가 실려 있고, 무역거래 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구의 합작을 희망한다', '식물성장촉진제의 수출을 희망한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다.

이밖에도 천리마 홈페이지는 전자상거래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 전자상점에서는 북한의 기계, 건설건재, 공예품, 식료품 등 각종 상품뿐 아니라 우표와 미술, 영화 등의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책방에서는 미화로 2달러 50센트를 내면 '회령혁명사적지' 등 북한의 도서나 화첩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전시장에서는 가을철 상품 전람회 관련 사진들을 볼 수 있다.

<그림 3-17> 천리마 상품 상세 페이지



이와 같이 동 사이트는 메뉴가 대부분 북한의 경제정책, 무역 및 투자 정보 등 경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특징인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선전, 통일정책 등도 게재되어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남 선전선동 목적의 인터넷사이트 개설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이번 '천리마'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무역거래 및 투자유치 목적의 경제 관련 사이트를 지속 개설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상의 북한 국가도메인(.kp) 사용 개시가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 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07년 9월 11일 '국제 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122]으로부터 국가도메인(.kp) 등록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후속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나) 코리아북센타(http://www.krbook.net)

'코리아북센타'는 일본에 소재한 조선출판회관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글과 일어판 사이트가 있다. 주요 구성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 책자, CD, 비디오, 잡지 등을 판매, 소개하고 있다.

<그림 3-18> 코리아북센타 사이트

2007년 9월 현재 동 사이트는 『사라진 말로』(송병준, 문학예술출판사), 『장검에 비낀 백

122)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약칭 ICANN)란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라고도 한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제공하거나, IP주소 번호 부여 등의 기능을 한다. 원어명은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다.

발』(박종철, 문학예술출판사), 『현대조선문학선집(37)』, 『1930년대 수필집』(류희정, 문학예술출판사), 화첩『조선의 민속』(김철민, 평양출판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 려명(http://www.ryomyong.com/)

'려명'은 투자유치와 상품판매를 위해 '평양륙일오정보기술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동 사이트는 북한 상품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전시장, 미술전시장, 역사전시장, 상표전시장'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상품 등록과 투자유치를 위한 고객문의(Customer Inquiry), 출품신청(Exhibit Application), 상표등록(Trademark Registration), 투자상담(Consultation)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집 '백두로' 페이지를 개설하여 백두산 지도 및 사진 보기와 동영상을 소개하는 등 백두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9> 려명 인터넷 홈페이지

평양륙일오정보기술사는 "6.15통일시대에 우리 민족끼리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여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혁명소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 혁명가 '결전의 길

로'(음악감상실)[123]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북한 혁명문예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평양소식'에서는 김일성의 노작과 김정일의 혁명활동, 연방제통일, 주체사상, 대남비방 등을 선전 소개하고 있다.[124]

3. 대남 사이버투쟁의 시사점

가. 대남 사이버투쟁의 유형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으로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전조선혁명)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대남혁명전략[125]은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126]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127]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128]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를 '미제식민지 대리통치정권'(또는 친미파쇼정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남한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미제국주의(주한미군 및 미대사관 관료)를 축출하여 남한민족의 해방(자주화)을 이룬다는 의미이며, '인민민주주의

123) '음악감상실'에는 혁명가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수십편의 혁명가요, 북한 찬양가요, 민요 등이 수록되어 있다.

124) '평양소식' 2008년 6월 24일자 주요 제목을 보면 "조국통일운동을 계속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2008.6.24),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유치한 망동"(2008.6.24), "김일성동지의 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통일하자》발표 35돐기념 평양시보고회"(2008. 6. 24),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2008. 6. 23),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앞길을 밝히시여"(2008.6.23) 등이 수록되어 있다.

125) 이 전략은 '지하당구축 전술', '통일전선 전술', '대중투쟁 전술'로 구분할 수 있다.

126) 북한은 1980년 10월 제 6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완수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7) 북한의 전조선혁명은 당면목표인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1단계, 남조선혁명전략)과 최종목표인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혁명'(2단계, 전조선혁명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8) 북한은 NLPDR을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Democratic이 아니라 Democracy로 사용) Revolution으로 표기하고 있다.

혁명'이란 '미제의 대리통치정권(파쇼정권)인 남한정권을 남한인민에 의해 타도'하여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민주화)을 수립하자는 것이다.[129]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130]을 채택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혁명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한국내 반정부 및 좌익용공세력의 활동지원', '남한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 '지하당 및 통일전선 구축', '반혁명역량[131] 제거'[132] 등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은 대남혁명전략을 달성하고자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 자주 · 민주 · 통일 투쟁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혁명 전위조직체인 반제민전은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하여 자주(반미자주화), 민주(반파쇼민주화), 통일(연방제통일)을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설정하여 20여년간 투쟁하여 왔다.[133]

반제민전은 구국전선[134] 사이트를 통해 '자주·민주·통일'[135] 투쟁과 북

---

129)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264-271면.

130) 북한은 1964년 2월 당 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①북조선 혁명역량 ②남조선 혁명역량 ③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라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

131) 반혁명역량이란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역량으로 국군, 대공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등을 의미한다.

132)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41면.

133) 북한은 1970년 1월 제5차 당 대회 이래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주장하여 왔다. '자주·민주·통일' 노선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방향과 지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1985년 7월 27일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3대 투쟁 강령으로 구체화되었다. '자주·민주·통일'은 아주 평범한 용어 같이 보이나 실은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이라는 대남투쟁 3대 당면 목표를 지칭하는 대남 적화혁명 용어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이 하나의 고리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134) 반제민전 사이트 구국전선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위인 일화, 위인 명언, 김일성방송대

한체제를 선전하는 한편, 남한 내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매시기 논평 및 담화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구국전선 강령과 규약, 반제민전의 주요문헌, 김일성·김정일의 위인명저 및 찬양서적, 영문판 News Report,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과 조선화보, 음악과 혁명가요, 북한의 혁명소설과 혁명서적, 주체사상 총서, '남조선혁명론', 운동강좌, 선군노선 찬양문헌, 국내 친북좌파권의 주요 문헌과 자료 등의 방대한 북한자료가 집약되어 있으며,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친북반한 세력을 지도하고 있다.

<표 3-10> 자주·민주·통일 및 체제 선전 내용[136]

구분		게재 내용
자주 민주 통일 투쟁	반미자주화	· 주한미군 및 미군기지 철수투쟁, 반미반전, 조미평화협정체결, 한미연합작전 비방(한미 연합훈련(Max Thunder),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을지포커스 훈련, 독수리훈련, 작계 5027), 한·미간 이간 책동(주한미군의 범죄, 북핵문제, SOFA 등)
	반파쇼 민주화	· 특정인 비방, 남한의 정책과 사회제도 비방(노동·농민·도시빈민 투쟁), 반정부 투쟁선동(민주화 및 정권 타도투쟁, 국내 정치현안 문제), 국보법철폐 및 공안기구(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해체, 국론분열 및 갈등 조장(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 극우

학 강좌, 동영상·사진·음악, HWP파일 자료모음, 각종 CD 내려받기(ZIP), 백두넷, 인터넷 백두산, 백두산, 통일아리랑(PDF), 우리민족끼리, 세기와 더불어 (HTML 및 PDF편집본), 인터넷 회고록강좌, 인터넷 회고록강좌 2, 구국의 소리(HWP), 통일여명(HTM), 통일여명(HWP), 월간 백서(HWP), 6.15주간(PDF), 인터넷 청년사상강좌, 인터넷 위대성강좌, 인터넷 통일혁명론강좌, 인터넷 당건설론강좌, 선군민족, 노선과 정책, 음악·악보, 연주, 민족민주논문집(chm), 청년문답' 등이 있다.

135) 자주란 한국사회가 자주독립국가 아니라 '미제'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사회이므로 '남조선혁명'을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 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미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여 '민족해방'을 수행하고 민족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민전과 국내 친북운동권 세력들은 '자주·민주·통일'중 선차적 임무로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을 주장하여 왔다. 민주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미제에 빌붙어 연명하면서 인민을 착취'하는 파쇼체제이므로 파쇼체제인 현정권을 타도하고 '노동계급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구현하여 '인민(계급)'을 해방해야 한다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의미한다. 통일이란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에 의한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조국해방'을 위한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136)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41면.

		반통일세력 척결, 반보수대연합 구축 등)
	연방제 조국통일	· 연방제통일 선전,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촉구,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반미반일민족공조, 3대 애국공조(반미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실현,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전개
체제 선전	우상화	· 김일성·김정일 업적 미화 찬양
	사상학습	· 주체사상, 김일성회고록, 김일성·김일성 선집, 선군사상 미화 찬양 및 학습 고취
	사회주의 우월성	· 북한 사회주의체제(정치·경제·사회·제도 등)의 우월성 선전 및 찬양, 북한 역사관 지지·선전, 북한의 문예론 및 창작물 찬양 선전

국내 친북반한 세력들은 매시기 투쟁노선과 지침을 구국전선 사이트를 통해 하달 받아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범민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의 자유게시판이나 원문 자료실 등에는 구국전선이 발표하는 논평과 성명서 등을 실시간 다운로드 받아 게재되고 있다.

2008년 7월 3일 현재 구국전선 게재된 '우리의 주장'에는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3편의 반제민전 논평(20편)과 담화(2편), 시국선언(1편)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23편의 글 모두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연방제조국통일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11> '우리의 주장' 주요 내용(2008년 7월 3일 현재)

구분		제목	주요 내용	비고
논평	7.2	· 촛불에 대한 이명박패당의 기만, 탄압책동을 두고	· 각계 민중은 희세의 역적집단인 이명박패당의 회유기만과 파쇼적 탄압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항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민중이 주인된 새 제도, 새 생활을 기어이 안아 와야 할 것이다.	반파쇼민주화투쟁
	7.1	· 「유엔군사령부」를 이 땅에 끌어들인	· 각계 민중은 전쟁과 살육, 모략과 범죄의 소굴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

		날을 맞아	더욱 거세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6.30	· 미국의 북침전쟁무력 확대책동과 관련하여	· 각계 민중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정, 외세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반미반전, 반이명박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6.25	· 6.25전쟁 58년을 맞아	· 각계 민중은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전쟁의 온상인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이명박과 같은 친미주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임으로써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 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 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6.21	· 이명박패당의 촛불「배후」음모책동과 관련하여	· 이전 독재자들과 꼭 같은 음모책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이명박정권이야말로 이전 군부독재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파쇼도배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며 그로 하여 차례질 것은 파멸뿐이다	반미자주화투쟁
	6.14	· 이명박일당의 통일교육원장, 연구원장 내정문제를 두고	· 각계 민중은 이미 지펴 올린 투쟁의 촛불을 전국민적인 항쟁의 불길로 승화시켜 이명박역도와 홍관희(통일교육원장)를 비롯한 친미극우 반통일광신자들을 철저히 매장해 버려야 할 것이다.	반파쇼민주화투쟁
	6.13	· 효순이, 미선이 6주기를 맞으며	· 각계민중은 내가 살고, 겨레가 사는 자주의 새 세상, 통일되고 번영하는 민중의 참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고 전국민적인 반미,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거세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6.11	· 이명박역의 촛불시위 배후세력망언과 관련하여	· 각계 민중은 투쟁의 횃불을 더 높이 치켜들고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파쇼광, 민중의 원수인 이명박패당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최후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반파쇼민주화투쟁
	6.10	· 6월민중항쟁 21주년을 맞으며	· 각계 민중은 미국과 군부파쇼독재자들을 전율케 했던 6월민중항쟁의 견결한 항거정신과 소중한 경험을 살려 이명박일당을 단호히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임으로써 민중이 주인된 새 제도, 새 생활을 하루 빨리 안아와야 할 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6.8	·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 20년을 맞아	· 각계 민중은 호전적인 미국과 친미사대, 외세의존,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이명박정권에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광우병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반미반전,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로 승화시켜 미국의 지배와 미군강점을 종식시키고 이명박정권을 단호히 끝장내야 할 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6.4	· 「꿈의 전투기」괌 미공군기지 전진배치 문제와 관련하	·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	반미자주화투쟁

		여		
	6.3	· 「한일회담」반대투쟁 44년을 맞아	· 현정권을 친일매국역적무리, 「한미일강화」책동 분쇄	반파쇼민주화투쟁
	6.2	· 이명박패당의 반북삐라살포 책동과 관련하여	·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 반북대결책동, 현정권 심판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5.27	· 「한미국방각료회담」시작 4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 한미합동훈련을 북침전쟁책동, 미군을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 대통령을 매국역적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5.26	· 일본반동들의 독도영유권 교육강화책동과 관련하여	· 대통령을 극악한 친일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5.17	· 광주민중봉기 28돌을 맞으며	· 반미반전, 평화수호, 미군철수투쟁	반미자주화투쟁
	5.12	· 확산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 대통령을 친미주구, 극악한 민중의 원수, 특등 매국노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5.10	·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 6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 현정권을 친미사대매국집단, 매국역적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5.3	· 군부호전세력의 첨단전투기과 정밀무기도입 책동을 두고	·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 전쟁정권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5.1	· 5.1절 118주년을 맞아	· 노동운동선동	반파쇼민주화투쟁
담화	6.15	· 반제민전 중앙위 부위원장 6.15 담화	· 각계 민중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이명박패당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정체를 똑바로 보고 전 민중적 항전으로 친미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과 영구분열,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우리 반제민전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전 민중과 더불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에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
	6.6	·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담화	· 이명박「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우리 민중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미군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 반제민전은 항쟁의 거리에 떨쳐 나	반미자주화투쟁 자주·민주·통일투쟁

			선 각계각층 민중과 함께 반미,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 나갈 것이다. 나는 이 기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 조직들과 인사들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민중의 생존권과 자주통일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남녘민중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시국선언	6.10	· 시국선언(반제민전 중앙위)	· 1. 전국민은 이명박정권의 최후의 항복을 받아낼 때 까지 투쟁의 촛불을 더욱 높이 치켜들자. 2.반이명박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3.반이명박투쟁을 조국통일운동과 결부시켜 나가자.	자주민주통일투쟁

2) 대남 사이버 통일전선 형성

북한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버 통일전선[137]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05년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 2006년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 2007년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도 통일전선 차원의 선동구호이다. 이러한 통일전선 구호를 친북 사이트에 집중 게재하여 대남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국 내 '촛불시위' 정국에 편승하여 '우리민족끼리'를 빙자 '민중'을 대상으로 하층통일전선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반제민전 중앙위 명의의 '시국선언'을 통해 "반이명박투쟁을 조국통일운동과 결부"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전체 민중'이 "전민항쟁의 횃불을 높이 지펴 올려 반미, 반이명박투쟁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야할 것

137) 북한은 대남혁명전술 중 통일전선을 가장 중요시 한다. 통일전선은 상층·중층·하층 통일전술로 구분한다. 상층통일전선은 우리사회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등 지도층, 중층통일전선은 우리사회 내 중간층을, 하층통일전선은 노농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전술이다.

을 선전선동하였다.[138]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시국선언”

특히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애국 민중은 촛불시위투쟁에 앞장서자.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전체 민중들이어! 우리 민중은 역사와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한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다. 4.19민중봉기와 5.18광주항쟁, 6월민중항쟁은 우리 민중의 반미, 반파쇼투쟁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오늘도 정의와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고 있다. 전체 민중이 애국선열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총 분기할 때 이명박패당의 종국적 파멸은 필연적이며 우리 민중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투지를 안고 전민항쟁의 횃불을 높이 지펴 올려 반미, 반이명박투쟁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7(2008)년 6월 10일

3) 대미 · 대남 정보수집

북한은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려면 엄청난 경비와 위험성이 따르지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저렴한 경비로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망에 접속하여 해킹을[139]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국가기관망을 무력할 수 있다. 즉, 북한 대남공작부서 담당자는 실시간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망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나 군사 및 산업정보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스크린하고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해킹을 통해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정보를

138)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시국선언”(구국전선: http://ndfsk.dyndns.org), 2008년 7월 4일 검색.

139) 전설적인 해킹 사건으로는 1987년초~1988년 8월에 독일 하노버의 마르쿠스, 헤스 등 5명의 해커가 대학 인터넷망을 통해 미국의 군사기밀을 소련에 빼돌린 사건이다. 이들은 컴퓨터 1대로 대서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경유해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방위업체에 무단으로 침입해 일을 벌였다. 이외에도 1993년 16세의 영국인 소년이 미국 국방부 전산망에 들어가 탄도 미사일과 전투기 설계 파일을 인터넷 공개포럼에 올려놓았던 사건이나, 1995년 국내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가 해킹당해 19시간이나 서비스가 중지 당했던 것도 비슷한 사례다.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북한은 해커 조직(121소, 35호실 기초자료조사실, 작전처)들은 한국 내 군(軍)기관, 정보기관 등 전략기간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해킹을 시도하는 한편, 유사시 이들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테러전에 대비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기관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해킹을 전담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적공조 소속의 204소는 국군을 대상으로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허위정보와 역정보를 유출하는 대남심리전과 사이버전의 연구와 실행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당국에 의하면 북한의 자동화대학은[140] 전산·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연 100여명씩 양성하고 있는데, '사이버 전문인력'의 해킹 수준은 미국 CIA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1]

이외에도 일반회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해킹과 보안관련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IT업체인 '릉라회사'가 최근 자체 개발한 컴퓨터 해킹방지 프로그램 '릉라방화벽'은 해커의 침입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고,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자료를 해킹하는 해커들을 자동으로 추적해 해커 주소와 해킹시간을 보여주는 첨단기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42]

---

140) 북한의 자동화대학은 군의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 및 전자전 등 군사과학 기술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이다. 동 대학은 1984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대학 등 민간대학과 공군대학 등 군사학교 우수 졸업생 100여명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동에서 2년제의 미림강습소로 출발하였으며, 1986년에 5년제의 미림대학(설립당시 미림동에 위치하였다 하여 미림대학으로 명명)으로 정식 개교하면서 현재 위치인 형제산구역으로 이전하고 각도 제1중학교 최우수 졸업생과 두뇌가 뛰어난 사병들을 유치함으로써 학교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학교명을 자동화대학으로 개칭하였으며 군 최고두뇌들의 집합체라 하여 수재대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동 대학은 지휘자동화,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기술정찰, 전자전 등 5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산학, 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등 전문분야를 교육시켜 매년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소위로 임관되어 여단급이상 부대 전산장교로 배치되며 일부는 학교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교원으로 발탁되기도 한다.

141) 2003년 4월 2일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가 주관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세미나에서 황철준 국방부 정보화정책관이 밝힌 내용이다.

142) "해킹부대 군관이 군 최고보직 부상도", <연합뉴스>, 2004년 5월 28일자.

4) 간첩 교신

최근의 국내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사이버공간(e-mail)을 교신 수단으로 이용하여 간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5년 11월 4일 국회에 제출한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2001년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통해 북한과 접선을 기도한 박 모(27)씨를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143] 2008년 7월 15일 체포된 위장탈북 직파 여간첩 원정화(34.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역시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서 입수한 군 관련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144]

이외에도 1999년 5월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은 160여 차례에 걸쳐 미국의 5027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과 국내 군 훈련 상황을 인터넷(e-mail)을 이용하여 범민련와 범청학련 북측본부 및 조총련 등을 통해 북한에 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03년 8월 강○○ 사건도 인터넷을 통해 대북보고와 교신 해왔음이 확인되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강○○은 일본거주 공작원인 박춘근에게 포섭되어 10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대북보고와 교신해왔음이 적발되어 국보법상 간첩,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으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145]

5) 상징 조작

---

143) 정운종(시사문제연구소 소장), "인터넷 암 약 간첩 검거를 보고", 시사문제연구소(http://cafe.daum.net/newsplaza, 2008년 9월 9일 검색), 2005. 11. 14.

144) 김태종,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 충격", <연합뉴스>, 2008. 8. 27.

145) 2004년 4월 북한 <로동신문>은 간첩활동 혐의로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쇼악행이 아닐수 없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였다.

인간이 다른 생물체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의미를 만든다는 것은 곧 상징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도 상징체계가[146] 없다면 불가능하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도 상징체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각종 언어(문자 혹은 음성 언어)도 대표적인 상징체계라고 볼 수 있다.[147]

상징체계는 이념과 상관없이 체제 유지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징의 생성이나 유포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상징의 생산과 유포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가(당)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148]

북한은 국기(인공기), 국가(애국가), 국화(목란), 조선노동당 당기와 당마크, 진달래, 붉은 색과 붉은 기, 혁명구호 등이 가지는 상징의 조작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함께 공산주의 및 '남조선' 혁명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있다.

친북 사이트에 게재된 상징물(깃발·백두산·건축물)을 통해 전파하고자 했던 주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통신 사이트 첫 화면에는 인공기가 게재되어 있는데, 인공기는 조선통신 사이트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다. 김일성은 인공기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

146) 유영옥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의 종류로 언어, 행위, 상상의 산물, 관념, 인물, 사물, 사건, 제도 8가지 존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유형으로 정리하여 분류하고 있다(유영옥, 『북한학』, 학문사, 1996, 17면 참조).

147)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6면.

148) 위의 책, 16면.

고 오랜 기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애국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게 하며 조선인민이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싸우려는 애국적 열의와 혁명승리의 불패의 위력을 표현"[149]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과 범민련에서는 구국전선과 범민련을 상징하는 깃발을 게재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과 백두넷에서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조국통일 3대 헌장탑'[150]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민족끼리'를 추구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상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친북 인터넷 사이트는 깃발, 건축물, 조형물, 백두산 등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강렬하고 명료한 상징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선전과 대남혁명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대남 사이버투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6) 대남투쟁 구호

일반적으로 주의·주장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인 슬로건(slogan)을 표어나 강령으로 표현하지만, 북한은 구호를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상, 과업 요구 등을 간결한 형식으로 나타낸 호소 또는 그것을 표현한 글"[151]이며, 표어는 "일정한 사회정치적요구나

149) 김주경, "우리나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조선문학』 1978년 9월호;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18면 재인용.

150) 평양 원림구역에 조성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조국광복 56돌이 되는 2001년 8월에 건립' 되었다. 북한은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명시)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명명하고 있다.

15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322면.

투쟁목표 등의 실현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담겨진 간결하고 호소적인 글을 쓴 대중선전 직관물"[152]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구호 유형은 △강령적 구호,[153] △시기별로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그를 완성하도록 선동하는 시기별 구호,[154] △당창건·정권수립·창군 등 주요 행사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대남 등 각 분야별 당면 과제와 완성을 선동하는 구호,[155] △정세 긴장이나 역량집중이 요구될 시 제시하는 시사적 구호, △군사훈련의 상황변화나 건설현장의 돌격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구호, △기타 기념일과 중요행사시 수시로 제시하는 구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호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간략하게 집약하여 제시,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심과 무조건 충성심 반복 제시, △당이 제시한 당면 목표 및 과제들을 수시로 제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대남분야별 중요 과제들의 환수에로 대중을 고무추동,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및 공산주의 필승의 신념을 고취, △혁명사상 등을 간명하게 반복 교육,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56]

북한은 1930년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일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승리의 신념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활용했던 '구호나무'[157]에서 구호의

15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⑵』,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824면.
153) 북한은 2002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21세기 강성대국 건설 구호'로서 '4대제일주의'(우리수령·우리사상·우리군대·우리제도 제일주의)를 제시하였다.
154)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조국통일 구호 제시하였다(《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신년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8.1.1).
155)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제시하며, 2008년 중요한 투쟁과업과 구호로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정치),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군사),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경제) 등의 투쟁구호를 제시하였다.
156)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24-26면.

사용 시점을 찾고 있다. 북한의 구호는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비롯하여 당대 시책과 집행과정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우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과 관련하여 연일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총동원하여 촛불시위의 동향을 신속히 보도하며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대남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내에서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일 이전인, 4월 26일 반제민전의 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158]라는 대남투쟁 선동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대남매체를 총동원하여 촛불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제시해 오다 지난 6월 10일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시국선언"을 통해 "현 시국은 전체 민중이 이○○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자기의 운명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미·대남투쟁 구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대남투쟁 구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59]

첫째, "전국민은 이명박정권의 최후의 항복을 받아낼 때 까지 투쟁의 촛불을 더욱 높이 치켜들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하면서, "타협없는 투

157) 구호나무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이 조국광복의 불타는 일념을 담아 구호들을 쓴 나무로 생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썼다."(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 322면), 북한은 '백두산 밀영을 비롯한 국내 각지에서 새로 찾아낸 수많은 구호나무를 혁명전통교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58) "지금 각계 민중들 속에서는 얼마전에 있은 이명박의 미국행각시 체결된 미국산쇠고기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정계, 사회계 등 각계각층 민중이 미친 소가 밀려온다며 연일 이명박의 친미사대 굴종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번 이명박의 「조공행각」이야말로 그의 친미사대매국정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이명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서라도 미국의 비위만 맞추면 된다고 여기는 철저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 각계 민중은 이명박의 친미사대, 외세의존, 매국배족, 반북대결행위를 반대하여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할 것이다"(논설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 반제민전, 2008년 4월 26일자).

159) "시국선언",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08년 6월 10일자.

쟁, 사생결단의 항쟁", "제2의 6월민중항쟁"을 통해 "이○○역도에게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둘째, "반미자주화투쟁은 친미주구인 이○○패당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우리 민중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기본투쟁"이라는 전제하에 "반이명박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투쟁 구호를 제시하였다.

셋째, 이른바 "이○○패당의 반북대결책동으로 하여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반이○○투쟁을 조국통일운동과 결부시켜 나가자"는 투쟁 구호를 제시하였다.

결국 반제민전은 시국선언을 통해 반미·반정부 적개심을 고취시키며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정권의 목표인 이른바 '남조선적화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해내외 친북반한 사이트를 대남 사이버 투쟁 매체로 활용해 북한정권이 설정한 3대혁명역량(국제, 북한, 남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혁명역량의 강화를 기도하고 있다.

<표 3-12> 친북 해외사이트 투쟁구호

사이트	구호	검색일
구국전선	·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2008.7.2
려명	· 민족의 힘모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2008.6.25
민족통신	·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2008.6.23
범민련	· 아! 통일 우리민족끼리	2008.7.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2008.6.24

나. 대남 사이버투쟁의 사회적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160] 해외언론기관(조선통신, 조선신보)과 해외교포 단체(민족통신, 민족시보), 위장단체 명칭(구국전선)의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 선전하는 출처불명의 사이트(우리민족끼리와 모악산 등)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내 인터넷 영향력이 2002년 대선을 통해 확연히 검증된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직영사이트 개설을 미뤄 오다가 대선을 통한 한국 내의 인터넷 영향력을 확인한 후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161]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사이버공간은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1) 다양한 메시지 전파

북한은 대남심리공작의 일환으로 대남 사이버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하여 왔다. 북한은 76여개의 해외 친북 사이트와 국내 자생적 친북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 통일전선형성, 정보수집, 간첩교신, 상징조작, 대남투쟁구호 등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파하고 있는 다양한 주요 메시지를 다음

160) 북한은 1996년 미국의 친북단체인 '북미주 조국통일동포회의'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조국통일의 방안과 경로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여 한국의 통일방안을 비판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하면서, 대남 사이버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내 네티즌들은 호기심에 의해 경쟁적으로 접속하게 되었고, 북한 중앙방송(1996.6.14)은 북한 찬양 홈페이지 개설을 즉시 보도하는 한편, '남조선 인민들 사이에 커다란 인기 끌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161) 최정님,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개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 직영, 친북 인터넷 사이트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71면.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주체(우리 식) 사회주의'(공산주의)를[162] 미화하여 찬양하며 '주체사상' 학습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

둘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날조하여 미화·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정치·경제·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고 있다.

셋째, '민족해방인민민주민혁명 전략'(NLPDR),[163] 통일전선전술, '대남투쟁 3대과제'(자주·민주·통일)·'조국통일 3대헌장'·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연방연합제 통일방안'(김정일의 연방제안, 낮은 단계연방제), 고려연방제통일안의 정당성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전술을 지지 선전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역사관과[164] 문화예술론 및 창작물을[165] 미화하여 찬양하며 북한 원전자료를[166] 소개 선전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 사회', '사대매국정권', '반민족적 정권', '반통일정권' 등으로 왜곡하여 반미·반정부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혁명 선전선동과 제 주장들을 지지 선전하고 있

162) 북한의 대남혁명론, 사회주의혁명,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권력, 노동자권력 수립 등을 선동하고 있다.

163) NLPDR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民族解放 民衆民主主義革命論)을 의미한다. NLPDR. 1985년 말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이론 중 하나이며,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받는 식민지로,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한국민중과 제국주의 및 그 예속세력간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식민지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중이 주체가 돼 혁명을 통해 제국주의 및 그 예속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투쟁노선으로서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조국통일을 설정하고 있다.

164) 북한은 미군을 점령군이며 소련은 해방군, 제주 4.3사건을 미제에 항거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제주인민의 의로운 항쟁, 6.15전쟁을 미제의 북침전쟁에 맞선 조국(민족)해방전쟁, 5.18사태를 반제반봉건 반독재투쟁을 위한 항쟁 등으로 왜곡하여 선전하고 있다.

165) 북한의 주체문예이론, 김정일의 종자론, 속도전, 혁명 소설과 영화, 음악, 미술 등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있다.

166) 북한혁명 서적,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등 언론방송, 대남선전 전단과 표현물, 반제민전 문건과 내용 등을 선전하고 있다.

다.[167] 이외에도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북한영화, 북한가요 등을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고자 우리의 국내외정세 변화 및 사회내의 제반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친북의식화, 위장 평화통일 공세, 반미·반정부 감정 조장 및 폭력투쟁 선동, 민심교란과 민관군의 반목 등 남남갈등 조장, 군의 염군사상 고취 등의 대남 사이버투쟁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대남 사이버투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국내외 친북추종세력들에게 대남혁명 지침을 하달하고, 지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사이트 개설 방법의 다양화

국내 친북운동권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전파하거나 수용·동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168]

첫째, 국내운동권의 각 조직들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조직들은 대부분 사이버투쟁을 전담하는 사이버팀(Cyber Team)을 운영하고 있다. 한총련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정

167) 반제민전은 남한정권을 미제의 식민지대리통치정권으로 매도, 주한미군 및 미군기지 철수투쟁, 반미반전 투쟁, 조미평화협정체결 투쟁, 한미연합작전(KEY RESOLVE·을지포커스·독수리훈련·작계 5027)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비방, 한·미간 이간 책동(주한미군의 범죄, 북핵문제, SOFA 등),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 비방, 남한의 정책과 사회제도 비방(노동·농민·도시빈민 투쟁), 반정부 투쟁선동(민주화 및 정권 타도투쟁, 국내 정치현안 문제), 국보법철폐 및 공안기구(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해체, 국론분열 및 갈등 조장(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 극우반통일세력 척결, 반보수대연합 구축 등), 연방제통일 선전,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촉구, 우리민족끼리·우리민족제일주의·반미반일민족공조·3대 애국공조(반미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실현,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전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168)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51면.

보통신국'을 두고 인터넷 등 사이버 사업을 총괄·집행하고 있다.[169]

둘째, 국내운동권들은 이미 개설된 기존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 유형은 친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자체 조직 활동에 활용하거나 유사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선전 자료로 다시 게재하고, 자체 제작한 선전 자료를 해외 서버를 활용하여 국내 관련 사이트에 수시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가하면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사이버 시위, 사이버 테러, 해킹 등을 전개하고 북한 또는 조직원간의 쌍방향 교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셋째, 국내운동권은 독자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독자적인 사이버투쟁을 전개하는 유형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이메일 계정을 가공인물 명의로 수십개의 아이디(ID)를 개설하여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국내운동권은 자체 인터넷망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는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등 분야별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170]

3) 사이버 공격 수단의 다양화

국내 운동권은 사이버 통신, 사이버 선전선동, 사이버 시위, 사이버 폭력, 사이버 테러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첫째, 국내 친북운동권은 구성원간, 단체간, 친북해외 조직간 등 사이버통신을 전개하며 보안유지를 위해서 인가된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망(CUG)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국내 친북운동권은 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단체 사이트의 자유게

169) 한총련 규약 '제18절 정보통신국' '제64조(지위 역할)'를 보면 "한총련의 제반 정보통신사업을 총괄 집행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170)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51면.

시판과 자료실 등을 이용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친북운동권의 주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사이버 선전선동을 시작하였다. 최근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노동신문과 구국전선의 논평과 녹취록, 성명서, 담화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한편, 주체사상 총서, 김일성·김정일 선집, 김일성 저작집과 회고록, 사회주의 및 김일성·김정일 찬양 자료, 철학사전,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론), 각종 노·농·학투쟁, 현정권타도 투쟁, 맑스-레닌주의 학습서 등의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171]

셋째, 국내 친북운동권은 청와대나 국회, 정보통신부,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그들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네티즌들로 하여금 집중적인 접속을 유도해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사이버 시위를[172]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 제8기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통신질서확립법 전면철회를 위한 한총련 국정원(http://www.nis.or.kr)·정통부(http://www.mic.go.kr) 온라인 진/격/투/쟁!"라는 지침을 산하 각급 학생회에 하달하여 사이버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173]

---

171) 친북지하조직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약칭 자민통위)는 2000년대 초반 가장 활발한 사이버투쟁을 전개했다. 동 조직은 '새시대 김일성청년주체주의자대오'임을 자칭하면서, 2000년 8월 5일 전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방송 녹취록인 "운동권내 유일사상 체계 확립"이라는 문건을 게재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동 단체는 전국연합, 진보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등 국내 재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기관지인 『통일여명』, 정세분석지인 『6.15주간』과 『백두산』, 북한의 대남방송(구국의 소리방송)의 녹취록인 『인터넷 구국의 소리』등을 게재하는 등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투쟁을 선도한 바 있다.

172) 사이버 시위의 시초는 1995년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블루 리본'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통신망에 저속한 정보를 올릴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 품위조항'을 미 정부가 신설하자, 이에 대항한 네티즌들이 수만 개의 웹사이트에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블루리본 그래픽을 올리고 헌법소원까지 제기,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엄청 난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노동자 총파업 당 시 '노동악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173) 한총련 '인터넷 특공대'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공격을 시도한 바도 있다. 그리고 2002년 12월 "국가보안법철폐 등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공동행동"(200여개 단체 참가)에서 청와대와 국회홈페이지에 집중접속을 시도하는 온라인시위를 전개한 바도 있다.

"[지침] ★한총련 최초 온 / 라 / 인 시위★"

"국가보안법 완전철폐·통신질서확립법 전면철회를 위한 한 총 련 국정원(http://www.nis.or.kr) ·정통부(http://www.mic.go.kr) 온라인 진/격/투/쟁!"

■ 보 냄 :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8기 한총련

■ 받으심 : 한총련 산하 각급 학생회

■ 내 용 : 국가보안법·통신질서확립법 전면 철폐를 위한 온라인 시위 지침 한총련! 파쇼악법 철폐 함성으로 인터넷을 평정하자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한총련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시위는 보수우익세력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위협이 될 것이요, 52년간 누적된 전 국민의 공분을 폭발 시키고 투쟁의 불길을 더욱 더 지피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한총련의 위용을 온라인상에서 본때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와 함께 하는 온라인 시위 세 가지 방법 ① 가상연좌시위(Virtual Sit-in) 사이트에 접속, 새로고침(Reload)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가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시위하는 방식. ② 게시판에 글 올리기(일명 도배) 국정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법무부 등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기 ③ 항의메일 보내기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항의메일 을 보내기 위한 폼메일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홈페이지 (http://freedom. jinbo. net)에 있음. 온라인 시위 일정 ① 가상 연좌시위 ☞한총련 1차 총집중 ★★★11월 21일 오후 10:00 ~ 10:30 : 국가정보원 http://www.nis.or.kr 11월 23일 오후 8시 ~ 자정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11월 25일 오후 8시 ~ 자정 : 자민련 11월 27일 오후 8시 ~ 자정 : 민주당 http://www.new97.or.kr/ ☞한총련 2차 총집중 ★★★11월 29일 오후 10:00 ~ 10:30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11월 30일 오후 8시 ~ 12월 1일 오후 8시 : 국회 http://www.assembly.go.kr/ ② 게시판에 글 올리기 : 11월 21일 ~ 12월 1일 ③ 항의메일 보내기 : 11월 21일 ~ 12월 1일 [예시] 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항의메일 보내기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내용 : 1. 언제까지 일제시대의 잔재를 가지고 가려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온 국민의 의지이다.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역사를 바로잡자. 2. 이제는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이다. 이러한 역사를 거스르는 자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의 길에 앞장서자. 3.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위 문안을 기본으로 합니다. - 다만 제목은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 [검열반대]로 해야 합니다. ■ 노벨이 비웃는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개정논의 기만이다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 온라인상의 국가보안법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 국가차원의 인터넷 장악음모 / 통신질서확립법 전면 철회하라 ■ 국민의 입 틀어막는 통신질서확립법 반대한다 ■ 6·15 공동선언과 파쇼악법은 양립할 수 없다 ■ 통일시대에 필요없다 /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 분단에 기생하는 보수우익세력 / 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174]

174) <h2>별이, "[지침]★한총련 최초 온/라/인 시위★", http://cafe.daum.net/6978/EVp/390(2008.9.10 검색), 2000. 11. 20.

특히 2003년 8월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를 주도했던 '통일선봉대범청학련 소속 '통일선봉대'는 한총련 홈페이지에 백악관(www.whitehouse.gov)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화면을 게재하여 청와대(www.president.go.kr) 자유게시판과 주한미군 사이트(www.usfk.or.kr) 열린 게시판에 연결해 두고 '1인당 하루에 10개 사이트에 글 남기기를 실천하자'며 사이버 시위를 주도하였다.

넷째, 사이버공간이라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전개되는 악성댓글과 유언비어 등에 의한 사이버 폭력은 한 개인을 파멸로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175] 국내 친북운동권 세력 역시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통령 등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친북운동권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현정부를 '친미예속정권'과 '반통일정권',[176] 한미군사훈련을 '전쟁책동', 미군을 '강점군'과 '학살자'로 매도하여 비방하는 가운데, "반전평화, 반미-반이명박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사이버 폭력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반제민전은 '구국전선' 사이트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역적, 호전적", '북침전쟁책동'으로 매도하여 "이○○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과[177]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대결광신자, 반통일역적"으로 매도하여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178] 나설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

175) 사이버 폭력은 한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 막대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활동까지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이버 스토킹이나 성적 음해, 욕설, 비방, 모욕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76) 범민련남측본부, "성명: 6월의 촛불함성 자주통일로 꽃피워 민주주의 완성하자", 2008년 6월 10일.

177) 반제민전 대변인 9.13 논평, "「국방개혁 2020」 발표 3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반제민전, 2008. 9. 13

178) 반제민전 대변인 9.12 논평, "군부호전집단의 반북대결망동을 두고", 반제민전, 2008. 9. 12.

6.25-9.8 반전평화 수호를 위한 범청학련 공동운동기간 선포문

전체 청년학생들이여, 반미-반전평화 투쟁으로 국민주권, 민족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내자! … 반미자주 대 친미예속, 반전평화 대 전쟁위협의 첨예한 대결전이 형성되고 있는 현 정국은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에 맞서 반미-반전평화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동족상잔과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분단의 상징인 6.25 한국전쟁 발발과 강점군 미군이 이 땅에 들어왔던 9.8까지 '반전평화 수호를 위한 범청학련 공동운동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각지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미-반전평화 정치선전활동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일 것**이다. … 우리는 국민들의 투쟁의지를 따라 더욱 거세찬 '쇠고기 재협상', '주권수호' 촛불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의 **쇠고기 재협상, 주권수호 촛불항쟁을 미국의 식민지 내정간섭 저지를 위한 반미자주 촛불항쟁으로 승화시켜 미국과 이명박 정권에게 결정적 타격**을 안겨 줄 것이다. … 우리는 8월 초부터 중순까지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반미-반전평화의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6.25와 7.27, 8.15, 9.8 등의 **주요 계기마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전평화, 반미-반이명박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열혈 청년학생들이여, 6.25-9.8 반전평화 수호를 위한 범청학련 공동운동 기간, 국민주권, 민족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반미-반전평화 투쟁**에 청춘의 고귀한 피와 땀을 남김없이 바쳐 나가자. … '6.28~7.6 완전 국민승리 주간'을 선포하고 '국민승리의 날'을 열어내자.

2008년 6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다섯째, 사이버 테러는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사이버테러로 대표되는 해킹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해킹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친북운동권 세력들은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Attacks), 논리폭탄(Bomb Attacks), 비동시성 공격(Asynchronous Attacks), IP 스푸핑(Spoofing)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등 국가 기관망이나 공공망을 해킹하고 있다.

4) 친북관련 게시물의 급증

2002년 12월 현재 북한이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해외 친북 사이트 및 국내 자생적 좌파성향의 사이트는 무려 2,168개나 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 기구인 한민전(반제민전)의 선전선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일부 시민·사회단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건수는 무려 7,751건에[179] 이르고 있다.[180]

2007년 2월 9일자 동아일보는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선군정치'를 비롯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서가 3,009건이나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1월 24일 현재)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경찰청이 '친북 관련 불법 게시물'이라고 규정한 이들 글은 남북공동실천연대 사이트에 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560건)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359건), 전국민중연대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각 282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49건) 순으로 나타났다.[181] 정보통신부는 2007년 9월 18일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민노당, 통일뉴스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친북 게시물 1,660건을 9월 28일까지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182]

---

179) 2002년 12월 현재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문건은 진보네워크 1,237건, 범민련남측본 210건, 민주노동당 592건, 전국연합 2,511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375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64건,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 7건, 전국농민회총연맹 484건, 전국노점상연합 214건, 전국민중연대 270건 등 7,751건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 『최근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상』, 합참심리전단, 2002, 6면; 조인상, "북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87면 재인용).

180) 위의 글, 86면 재인용.

181) "인터넷 북찬양문서 3009건 최근 한달, 평소의 4배 게재 ", <동아일보>, 2007년 2월 9일자.

182) 2007년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민노당, 통일뉴스 등 13개 사회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불법 북한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가진 결과,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불법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이 2008년 8월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는 76개이며, 이중 서버를 미국에 둔 친북사이트가 31개, 일본 19개, 중국 13개, 독일 4개, 기타 국가 9개였다. 또한 동 자료는 노무현 정부 출범(2003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친북 관련 게시물이 게재된 포털 등에 대해 모두 6,377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183] 국내 사이트에 친북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관련 사이트에 삭제 권고를 한 건수는 2003년 272건, 2004년 1,010건, 2005년 1,238건, 2006년 1,388건, 2007년 1,43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 8월까지 모두 1,035건을 삭제 요청 또는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국내 사이트에 친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184]

<표 3-13> 경찰청 친북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권고) 현황

년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22 현재
건수	6,377	272	1,010	1,238	1,388	1,434	1,035

* 자료: 경찰청,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2008 국회제출 국정감사자료); <동아일보>, 2008년 9월 23일자.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의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혁명 전위대로 알려진 '반제민족민주전선'의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올려진 글들을 퍼다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해 한국

보로 의결되어 해당 게시 글의 삭제를 명한다"는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친북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83) 경찰청,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 "경찰청 관리 친북 사이트는 모두 76개", <조선일보>, 2008년 9월 23일자 재인용.

184) "친북게시물 삭제요청, 올 8월까지 1035건", <동아일보>, 2008년 9월 23일자.

의 포털이나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이다. 구국전선의 글을 옮겨다가 국내 사이트에 전파시킬 경우 PC방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더라도 누가 올렸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은 2004년부터 200년 1월까지 인터넷에 친북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는데 대부분 학생운동권 출신들인 것으로 알려졌다.[185] 문제는 친북 관련 글들을 네티즌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도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될 경우에 이념적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최○○ 사건

2006년 8월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전 등 북한 찬양문건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파해온 최○○(34세, 여, 한국○○연구소 연구위원)을 검거한 바 있다.

최○○은 전국 PC방을 떠돌며 북한의 반제민전(구 한민전)의 구국전선 사이트에 올라온 선군사상, 주체사상, 김정일 수령론 등 각종 이적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편집하여 국내 친북 운동권 사이트 16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개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웹사이트에 친북관련 게시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대남 사이버투쟁 통해 국내 친북반한세력의 행동강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할 뿐 아니라, 각종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 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03년 초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자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186] 강조하며 남한 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사이트를 직접 운용하거나 다른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친북반한 의식화를 주도해 나

185)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체제 찬양글?", <미국의 소리>(http://voanews.com/Korean/archive; 2009년 9월 2일 검색), 2007. 2. 9.

186) 합동참모본부 보고서, 『최근 對南 심리전 실태』, 2003.2.25; "인터넷부터 赤化되고 있다", 『월간조선』 2003년 4월호, 2003 재인용.

가도록 지시한 바 있다.[187] 특히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친북 해외사이트를 급격히 개설하였다.

5) 친북반한 사이트의 정당화

정부당국은 친북 해외사이트에 대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7건을 차단한 이후 2007년 9월말 현재 42개의[189] 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190] 그럼에도 차단된 사이트 중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또 다른 친북 사이트들을 연결해 놓아 네티즌들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친북사이트를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학연구소'의 경우 당국의 차단 조치에 대비해 2개의 예비 주소를 만들은 바 있다.[191] 이외에도 2008년 8월말 현재 '려명'[192] 사

<그림 3-20>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188]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 42개

구국전선	통일학연구소	주체사상
조선신보	백두넷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조선통신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의 노래	민족시보
코리아북 센터	조국통일 21	조선저작권판매관리센터
조국평화통일협회(통일한마음)	민족자주대	조선메디아주식회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악산)	조선언론정보기지
겨레사랑터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
코리아 네트워크	조선출판물	선군정치연구소조(1)
조선음악	화려은행	선군정치연구소조(2)
조선대	김일성종합대학우리민족강당	평화통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선우호협회	조선인포뱅크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내나라	실리은행
민족통신	재독일동포협력회	조선우표

187) 김필재, "'김父子 찬양·강정구 논문게재' 親北사이트 열리고 있다", <KONAS net>(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7454, 2008년 6월 30일 검색), 2005년 10월 17일자.

188) <동아일보>, 2007년 9월 29일자.

189) <동아일보>, 2007년 9월 29일자; 경찰청은 2007년 8월 31일 현재 73개 친북해외 사이트를 발견하여 37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0)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2006년부터 2007년 3월 26일 현재까지 국가산업기술 유출자, 개인신상정보 누설자, 총기류 판매자, 마약 밀반입 판매자 등 71명을 적발해 유관기관에 이첩해 의법 조치토록 한 것과 함께 김정일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친북사이트 32개를 발굴하여 정통부 등에 통보해 차단 조치한 바 있다.

191) 이 사이트에서는 "통일학연구소가 다시 홈페이지를 등록해도 또 차단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 연결 주소를 기록해 두라"고 네티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192) 2008년 9월 10일 현재 '려명'의 '평양소식'란은 "어버이수령님을 천만년 받들어모시리(2008. 9. 8)", "전쟁피리를 불어대는 친미하수인"(2008. 9. 8), "공화국은 민족운명개척의 위대한 기치" 등 김일성부자 및 북한체제 찬양과 대남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이루어져 있

이트 등은 프락시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접속이 가능하다.[193]

<표 3-14> 친북 사이트 규제 관련 일지

년. 월. 일	담당	결과
1997~2000	정보통신부	· 친북문건 게재 혐의로 3개 사이트 접속차단, 39건 게시판 삭제 조치
2000~2004. 9	정보통신부	· 국내 16개 사회단체 사이트 친북문건 게재 혐의로 774건 삭제, 4개 사이트 폐쇄조치 경찰청, 15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3.2.25	국방부	· '대남 심리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북 직영 사이트 8개, 해외 친북 사이트 9개, 국내 친북 사이트 98개 등 총 115개 사이트가 북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고 발표
2003.7	정보통신부	· 민주노총 게시판 김일성 동영상 게재 혐의로 게시판 삭제 조치(자진삭제)
2003.9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	·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직영 사이트 7개와 국내외 친북 사이트 92개가 운영중"이라고 발표
2004.1.27	경찰청	· "북 직영 사이트 8개와 해외 친북 사이트 26개가 북의 체제를 찬양하고 있다"고 발표
2004.9	정보통신부	· 전국연합과 전국민중연대 게시판 친북관련 문건 게재 혐의로 7건 게시판 삭제 조치(자진 삭제)
2004.9.8	경찰청장 (최기문)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3개의 친북 사이트가 활동 중"이라며, 8월말까지 집계된 '해외개설 친북사이트 현황'(총 40개) 발표
2004.10.19	대검찰청 공안부장(강충식)	·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에 개설된 친북사이트 43개"라고 대답
2004.10.28	경찰청과 국정원	· '해외개설 친북사이트' 46개 정통부에 접속차단 협조요청
2004.11.11	경찰청과 국정원	· 정통부에 김일성방송대학 접속차단 협조요청. 재향군인회 등 90여개 보수단체, "친북세력과의 인터넷 사상전을 벌이겠다"며 인터넷 범국민구국협의회 발족
2004.11.12	정보통신부	· '해외개설 친북사이트' 31개 접속차단. 15개는 증거 부족으로 의결 보류 판정
2004.11.19		· 현재 김일성방송대학 접속 중단 상태

다.

193) 차단된 32개 친북 인트넷 사이트 가운데 2005년 11월 현재 프락시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접속이 가능한 곳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연구소조, 구국전선, 통일학연구소, 조선우호협회, 고려바둑, 조선관광, 평양정보센터, 현장의 소리 등 9개 사이트나 되었으나, 이후 대부분 차단되었다.

2007.3.26	국군기무사령부	· 김정일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친북사이트 32개를 발굴하여 정통부 등에 통보해 차단 조치
2007.9.18	정보통신부	·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민노당, 통일뉴스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친북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라고 명령

우리정부의 차단 조치에 대해 한민전(반제민전)은 한편으로 기존의 '구국전선' 사이트와 다른(http://ndf-sk.dyndns.org) IP주소로 사이트를 추가 개설(2005. 2. 21)하여 국내 접속을 재개했다. 동 사이트는 '우리의 주장', '자주·민주·통일의 광장', '절세의 위인상', '주체 사상학습실' 등의 코너를 두고,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과 담화,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 찬양, 북한체제의 우월성 및 선군정치 선전, 김정일 저작과 김일성 회고록,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을 게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민전은 '구국전선' 사이트 등을 동원하여 차단 조치된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락시(proxy) 서버' 사용방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개 선전하고 있다.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http://nadrk.org)의 정보자료마당(2005. 6. 3)에 '프락시 서버로 접속 차단된 사이트 접속하기'란에서는 정부가 2004년 친북 사이트로 규정하여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가 총 40개임을 지적하면서, 친북 사이트 접속유무[194]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프락시서버 사용방법-백두넷에 있는 자료'(2005. 6. 3), '프락시 서버로 접속 차단된 사이트 접속하기-친북사이

194) 접속되는 사이트(22개)는 조선통신, 조선신보,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우리민족끼리, 조국평화통일협회(평통협),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백두넷, 조선의노래, 조국통일21, 구국전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코리아북센터,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악산), 겨레사랑터, 코리아네트워크, 실리은행, 내나라, 조선우표, 조선출판물, 범민련 공동사무국 등이다. 접속 안되는 사이트(18개)로는 조선우호협회, 고려바둑, 평양정보센터, 현장의소리(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주체사상, 조선관광,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백두산, 조선복권, 통일아리랑, 조선인포뱅크, 주패사이트, 애국의 길, 민족자주대학, 조선음악, one-corea,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군정치연구소조 등이다.

트 접할 수 있다'(2005. 6. 3), '프락시서버 접속 유틸'(2005. 9. 5), '남측에서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 등록'(2005. 11. 15) 등의 게시물을 통해 친북 해외사이트 접속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195]

북한 역시 친북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 언론과 친북 사이트를 동원하여 "남조선이야말로 폐쇄된 사회", "군부파쇼독재의 언론암흑기를 연상케 한다", "반민족 범죄와 망동" 등으로 극렬히 비방하면서, '국가보안법 짓밟기 운동'을 전개해야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해외 친북사이트 차단 및 국내 사이트의 친북 게시물 삭제 조치에 따른 북한의 대남비방 선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로동신문(2004. 12. 3)은 "남한당국이 친북사이트 접속차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침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전면 파탄 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 6.15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남조선 인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반민족적 범죄"라고 비방 했다.

둘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7년 3월 31일 "6.15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의 이른바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동 담화는 2007년 3월 26일 기무사가 "'북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친북사이트' 30여개를 찾아내어 정보통신부를 통해 차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면서 이는 "6.15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맹렬히 비방했다. 그리고 "군정보기관인 기무사령부까지 '친북사이트' 색출에 동원한 것은 과거 군사파쇼깡패들이 하던 짓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선군정치를 바로 알고 따르려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추세"라면서 인터넷 차단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95) 김윤영, 『북한의 대남문예투쟁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71-72면.

다음은 북한의 조평통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 전문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군 《기무사령부》는 《북의 선군정치와 련방제통일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친북싸이트》 30여개를 찾아내여 《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차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인터네트차단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정보화시대의 문명을 향유하는 권리마저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쇼폭거이며 6.15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반민족적망동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반시대적인 인터네트차단책동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에서도 북을 바로 알려는 지향이 날로 높아가면서 인터네트를 통하여 북의 현실을 자유롭게 접하고 글도 마음대로 올릴수 있게 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하여 우리의 인터네트 홈페지들과 남조선통일운동단체 홈페지들을 《친북싸이트》로 규정하고 오늘까지 남조선인민들이 직접 접속하거나 마음대로 리용할수 없게 계속 차단하고있을뿐아니라 인터네트상에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것마저 가로막으면서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이번 남조선군 《기무사령부》의 발표는 남조선당국이 인터네트차단책동에 군정보기관까지 동원하면서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인터네트차단책동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는것은 겨레의 지향에 대한 도전이고 북남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이다.

도대체 동족의 인터네트접속마저 일체 차단하면서 6.15와 북남관계개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체면이나 있는가 하는것이다.

특히 세계가 다 알고 지지공감하는 선군정치를 남조선인민들만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나머지 리성까지 잃었다는것을 보여줄뿐이다.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대륙과 대양을 넘어 인터네트를 통하여 서로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고있는 오늘 동족끼리 인터네트를 접할수 없게 빗장을 지르는것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더우기 군정보기관인 《기무사령부》까지 《친북싸이트》색출에 동원한것은 과거 군사파쇼깡패들이 하던 짓을 방불케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그로 해서 얻을것은 내외의 비난과 조소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위력한 보검인 선군정치를 바로 알고 따르려 하는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화석같이 굳어진 구시대적인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무모한 인터네트차단조치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주체96(2007)년 3월 31일 평양

셋째, 친북 해외 사이트 '민족통신'은 "민족반역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내외 네티즌들의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 항의 성명전, 국보법 철폐 순간까지 국보법 짓밟기 운동 전개" 등을 선동하였다.[196]

넷째, 북한 조선중앙방송(2007, 10, 14)은 정보통신부의 친북 게시물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반통일 세력들은 인터넷 접속 차단에만 그치지 않고 보안법을 앞세워 일체 인터넷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제하는 데로 탄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다섯째, 조총련이 발행하는 '조선신보' 인터넷 판은 2004년 11월 13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면서 인터네트 통제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정부의 조치를 비방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단체들은 2004년 친북 해외 인터넷 차단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표 3-15> 2004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따른 성명서 발표 현황

일시	발표 단체	제목
2004. 11.2	남북공동실천연대	· 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11.14	민족정기구현회	· 해외싸이트를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11.15	재미동포전국연합회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주동자는 통일의 적으로 심판하자
11.16	6.15남북공동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 소위 친북싸이트 차단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
11.16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변인	· 북한관련 인터넷 언론 접속 차단은 시대착오

196) 미국소재 인터넷매체인 <민족통신>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2006년 4월 26일 한국 정부가 17개월째 접속을 불허하는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외동포 인터넷언론 차단 해제 촉구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청 등의 해외동포 언론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는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자유를 위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각계 국민과 단체, 언론인과 싸워나갈 뜻을 다짐한다"고 주장했다(문관현, "인터넷매체, 정부에 친북사이트 차단해제 촉구", <연합뉴스>, 2006. 4. 26).

11.18	재독일동포협력회	· 참여정부는 해외 애국동포들의 인터넷차단을 즉각 해제하라
11.1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 통일시대를 우롱한 인터넷 접속차단을 규탄한다
11.21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중앙위원회(미국뉴욕)	· 인터넷 사회의 적들은 자멸의 비극을 부른다
11.24	조선기자동맹	·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차단조치 중지 촉구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 자료: “성명서”, 민족통신(http://www.minjok.com), 2004년 11월 25일 검색.

결국 북한이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차단조치에 대해 대남 선전·선동 매체를 총동원하여 맹렬히 비방하고 있는 것은 199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대남 사이버투쟁 공세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전망 및 대응책

1. 전망

북한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사용자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활용의 편리성, 확산의 신속성, 정보 조작과 축적의 편리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 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보안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이버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친북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국내 친북운동권을 대상으로 대미·대남 사이버투쟁을 강화하고, 정국교란을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반전평화·우리민족끼리' 등을 내세워 미군철수 및 미군기지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 정비' 이행을 표방하여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보안수사대·국정원·기무사) 철폐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안보시스템 무력화를 기도하고 '자주·민주·통일투쟁' 공세를 강화하며 김정일의 지도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친북사조 확산을 지속화할 것이다.

둘째, 최근 컴퓨터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교하고 다양한 사이버 심리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은 정부당국의 친북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에 대해 해외 경유나 프락시(Proxy) 방법 등을 통해 네티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사이버공간을 통해 간첩교신 수단으로 최첨단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스테가노그래피란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 커버라 불리는 다른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비밀 메시지를 숨겨서 전송하는 첨단 인터넷 기술이다. 즉, 비밀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 은닉 채널이 보이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기술이다. 이 방식은 메시지를 숨기는 것은 물론, 메시지 전송여부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1년 알카에다가 9.11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 당시 이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은 국가 주요기관 전산망을 해킹하여 안보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전산망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유언비언, 역정보 누출 등 사이버 대남공작과 대남선전선동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넷째,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시위, 인민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사건(7.11),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 핵 문제 등의 책임을 한·미 당국에 전가시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 살포하여 국론분열과 반미의식을 조장하는 대남·대미 사이버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최근 정부당국의 친북반한 해외 사이트와 친북관련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전위조직과 국내 관련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체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보위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통일여명 편집국은 "긴급통보"를 통해 공안기관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윈도우즈 안의 히스토리와 임시 인터넷파일, 쿠키 등의 즉시 완전하게 삭제할 것, △인터넷옵션 내용의 자동완성 폼지우기 및 암호지우기를 실행할 것, △이미 자료를 올린 'PC방'을 다시 이용하지 말 것 △자료 올릴 경우에는 프락시서버를 이용할 것 등의 보위지침을 내린바 있다.[197]

197) 통일여명 편집국, "인터넷전국연합을 이용하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통일여명 긴급통보(편집국 보도 20호)", 『통일여명 1주년 기념』,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1월 20일, 521-523면.

2. 대책[198]

가. 기본 원칙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체계적·조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은 '남조선혁명'의 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남혁명 전술의 일환이라는 기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대남 심리전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대남투쟁 선전선동 문건 등 친북관련 선전물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으로 축적한 내사 자료를 통해 공작수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안보 요원의 정기적 교육훈련을 통해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인센티브 도입으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과 국내 친북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사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보안경찰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안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증원 및 재배치 등에 필요한 실직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로

198) 이하의 글은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서울: 다나, 1996), 김문선, "사이버테러의 대응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성진, "사이버테러의 실태와 사이버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보안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나. 인권 및 법 차원의 대책[199]

1) 인권대책

인권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보장의무' 규정에 의한 헌법상 권리인 동시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2005년 '인권보호센타'를 설립하여 4대 실천과제를[200] 주요 골자로 하는 '인권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경찰 역시 사회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 보호 및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야하면 보안경찰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의해 과장되게 선전선동되거나 점차적으로 악용되는 등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투쟁에 대한 내사, 수사, 체포(검거), 신문 및 송치 등 보안 수사실무의 전 과정에 있어 피의자 체포시 적법절차 준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 구속전 피의자심문 신청권 등 피의자권리 보장 등 법과 원칙 및 인권을 준수하여 시비발생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인권보호와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투쟁'과 관련된 안보위해 사범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하는 확신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시비 차단이나 인권침해 방지 등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인권보호 및 신장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정당성

199) 김윤영, 『북한의 대남문예투쟁에 관한 연구』, 67면.

200) 경찰청의 4대 실천과제는 '밤샘조사 금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환경의 쇄신', '피해품 회수활동 강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신변호보체계 구축 등 사건관계인의 2차 인권침해 방지',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 등이다.

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법령 보완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과 친북관련 게시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 경비 등이 요구되는 지속적이고 세밀한 추적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친북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개하는 대남 사이버투쟁과 국내 친북관련 게시물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안보위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보완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국가보안법 내에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사이버공작·사이버테러·해킹과 국내 웹사이트의 친북관련 게시물 등과 관련된 안보위해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하거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201] 명시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202] 유통 금지 적용의 논란 소지를 차단해야할 것이다.

다. 보안경찰 차원의 대책

1) 조직 · 인력 확충

현재 경찰청 보안국[203] 보안2과 내에 편재된 사이버보안계(사이버분

201) 동 법률 정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8항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한 처벌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석·수사·기법개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지원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보안사이버과 또는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안사이버과(수사대)는 기획운영계, 사이버정보분석계(북한·국내·해외반), 기술지원계, 사이버수사계(신문반, 현장대응반)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은 보안과 내에 보안사이버계 또는 보안사이버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보안사이버계(팀)는 기획운영반, 사이버정보반, 기술지원반, 사이버수사반 등을 두어 전담반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보안사이버팀'을 검토하여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경찰서는 사이버 수사 전문 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전문요원은 새로 선발하여 충원된 인원이어야 한다.

확대된 조직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2008년 9월 1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0년 807명이던 전국 보안수사 담당 경찰은 현재 374명으로 50% 이상 감축됐다. 또 전국 보안수사대도 1998년 44개에서 올 7월 기준 34개로 줄었다. 김대중 정부가 구조조정 명목으로 일선 경찰서 보안과를 폐지했고(1998년 21개, 1999년 60개), 노무현 정부가 광역 보안수사대 수를 크게 줄인 결과다. 경찰의 대공수사 체계는 경찰청 보안국과 지방청 보안과, 지방청 보안과 소속

203) 보안경찰 조직은 경찰청 보안국, 지방경찰청 보안부 또는 보안과, 경찰서 보안과 및 보안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의 보안국은 1994년에는 보안5과가 폐지되었고, 1999년 5월 24일에는 보안4과도 폐지됨에 따라 현재 보안1과, 2과, 3과 등 3개의 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보안1과는 서무, 기획, 보안관찰업무,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 안보계도업무, 국내선공항안전업무를, 보안2과는 방첩·안보위수사지도, 남북교류협력업무, 합동신문(합신)업무, 대공상황분석, 보안사이버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안3과는 방첩수사, 안보위해사법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안부(보안1·2과), 경기지방경찰청은 제3부(보안부)를 두고 있으며, 이외 지방경찰청은 보안과와 각 지방경찰청 단위별로 1내지 3개의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성에는 보안과(50개 서) 혹은 정보보안과(183개서)를 두고 있다.

보안계와 보안수사대로 구성돼 있다.[204]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보안수사인력과 조직이 급격히 감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컴퓨터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규 인력으로 충원되어야함이 타당하다.[206]

<그림 4-1> 보안수사 인력과 보안사범 검거 현황[205]

그리고 조직 확대로 충원된 보안사이버 수사요원들은 해외 및 국내자생의 친북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남혁명 선전선동 문건을 다운로드 받아 퍼 옮기거나 게재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일과 시간 이후의 검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자동검색시스템'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대남혁명 선전물 유포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내사로 이어져야 한다.

2) 장비 및 예산 확보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사이버 수사 요원들의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안사이버 수사요원의 특수한 업무 성격과 급속히 발달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효과적으

204) 정장열, "[추적] 대공수사 '실종 10년' 어쩌다 이렇게 됐나", "위클리조선"(http://weekly.chosun.com, 2008. 9. 16 검색), 2008. 9. 15 재인용.
205) "보안수사 '찬밥 10년'에 반토막", <동아일보>, 2008년 9월 2일자 재인용.
206) 1998년 전체 경찰관 중 보안경찰은 4.6%에서 2004년에는 2.1%로 현저히 감소되는 등 보안경찰의 인력과 조직이 감축되고 있다(경찰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Ⅱ)』, 경찰청, 2004, 691면).

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의 확보는 물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보안사이버 요원들에 대한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이직현상을 차단하는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전문 인력 확보 방안

가) 신임 순경 선발

보안사이버 요원은 보안수사 능력을 구비해야함은 물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해야하는 숙달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경찰청 보안국은 우수한 보안사이버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신임순경 선발 과정에서 컴퓨터 관련학과 전공자를 선발하여 기본교육(중앙경찰학교)을 이수하게 한 후, 경찰수사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별도의 보안사이버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임지에 배치해야 한다.

둘째, 여성경찰관을 보안사이버 요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최근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재교육을 통해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지식을 겸비한 다양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 침착성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친북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성들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성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컴퓨터 회사 전문인력의 특별채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관련 기술 전문가를 자체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고도의 기술을 겸비한 컴퓨터 분야 전문가를 보안사이버 요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게 한 후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컴퓨터 전문가들

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으나, 이들이 직무를 완료한 후 사회로 환원될 경우 직무 중 숙지한 보안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이버 수사요원의 탄력적 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1993년부터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던 중견 전문인을 경찰관으로 특채하기 시작했다[207]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경찰학과 개설대학과 협력체제 강구

경찰학과 개설대학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국 100여개 경찰학을 운용하고 있는 대학과의 경학협력을 통해 적정규모의 사이버경찰학과나 사이버범죄 수사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위주의 커리큘럼(curriculum)으로 편성하고, 사이버수사 경찰관을 교수요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대학과정을 마친 자원들이 보안사이버 요원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센티브 도입

보안사이버 요원으로 확보된 우수한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직(轉職)을 최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전문 인력들은 보수가 좋은 사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보안사이버 요원에 대한 활동비나 직급, 승진제도 등을 현실화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관리하는 한편,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채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선발된 보안사이버 요원 중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당 현실화, 진급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등의 조치로 타부서로 이직

207)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련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2000, 158-159면.

하는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4) 사이버 요원 자질 향상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은 오프라인상과 달리 시공간을 초월한 특수성 때문에 그 수법이 날로 정교화·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사이버 요원들은 자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 재교육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

경찰청 보안국은 보안사이버 전문요원의 대응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안사이버 요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준차를 반영하는 대남 사이버 심리전 수법과 추적기법, 증거채집기술, 증거자료 분석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워크샵과 같은 정기적인 재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전문교육 강화

보안사이버 수사요원의 정예화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시행하는 4주 과정의 '사이버범죄수사과정'과 '보안수사과정', 경찰종합학교의 '보안실무과정'(2주) 내에 '북한의 대남사이버 투쟁'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보강하거나 신설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교육기관 내에 별도의 전문교육과정인 '보안사이버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 사이버교육 기관에 해외연수를 보낸다거나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경과제를 도입하여 인적 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다) 위탁교육 확대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이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기무사)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전문화교육 과정에 필요시 위탁교육을 통해 사이버투쟁에 대한 내사와 수사에 대한 공작요령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위탁교육 후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가의 교육기관에 안보사이버 수사요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선진 사이버 수사기법을 배양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유관기관의 보안사이버 부서와 인적교류와 업무협조를 위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라) 관련기관 보안전산 전문과정에 교육프로그램 지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안전산 전문화과정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투쟁을 비롯한 심리전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수사기법의 현대화

북한의 대남공작은 비밀과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당국의 접근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흔적 제거, 사이트 폐쇄와 새로운 사이트 개설, 타른 사이트로 이동 등의 보안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친북 사이트를 열람할 경우 접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프락시(proxy)서버를 이용하거나,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우회 접속을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위 조직이나 친북세력들은 자체적으로 대남사이버 보위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친북 사이트 중 일부는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아 대남혁명 선전선동 게시물 등 친북관련 문건 게시자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증거수집 분석기법인 포렌식[208] 대한 교육과 관련장

208) “Computer forensic”은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하여 컴퓨터 저장 매체 등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로부터 자료(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존하여 법적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컴퓨터 포렌식의 결

비를 확보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실'을 운영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이 예상되는 정부 기관이나 중요 산업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이 발견되면 즉시 추적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공세를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분야별·사안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안사이버 범죄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과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비와 기술을 현대화해야한다.

6)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민간 전문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킹이나 역추적 기법 등 급변하는 보안 사이버투쟁 기법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기무사, 정보통신부,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사이버상의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상의 공조 수사체제를 강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7) 기타

첫째, 북한 직영 사이트와 친북 사이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정보기관 마다 북한 직영 사이트나 친북 사이트 등에 관리 자료가 다르며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209] 경찰청 보안국은 신규 또는 소멸하는 친북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하

과물은 법적으로 인정돼야 하므로, 컴퓨터를 포함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의 전자증거물을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209) 국정원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은 친북반한 사이트 현황을 북한 직영 사이트 7개, 친북 사이트 99개 등으로 파악한 바 있고, 국방부에서는 직영 8개, 국외 친북단체 9개, 국내 단체 98개 등으로 파악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4년 7월 20일자).

고, 축적된 자료를 관계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에 제공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과 친북 세력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한 '사상전' 차원의 사안별 대응전술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사이버 역공작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해 방어적, 소극적 대응태세를 유지했다면, 앞으로는 대북심리전 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친북 사이트에 동원되는 불순자금을 추적하여 그들의 활동영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이버감시망(모니터링)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엄밀성과 확산성으로 인해 보안 기관에 의한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세력의 사이버 세력화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응하는 자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 내부의 인터넷 개방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된다. 북한 내부에 인터넷 서비스가 내년부터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개방은 대남혁명 전위기구 등 특수기관이나 특정인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무차별적인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북한과의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은 양날의 칼날과 같아 교류와 협력에도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친북 해외사이트와 국내 자생적 친북사이트의 대남 사이버투쟁의 양상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향후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남 사이버투쟁이란 북한 및 그 추종세력들이 한국사회의 사회주의를 위해 사이버공간을 통해 전개하는 모든 선전선동 활동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사이버투쟁 역시 비대면성과 익명성, 신속성과 익명성, 편리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북한의 통일전선부 등 대남공작부서는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정찰국 121소와 중앙당 35호실, 작전처, 적공국 204소 등의 대남 사이버투쟁 조직에 500여명의 사이버전사를 투입하여 심리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 심리전, 해킹, 전산망 무력화와 공격 등을 통해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에 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과 김책공대를 설립한 후 예상되는 남북간 정보전에 대비하여 컴퓨터 및 정보전 전문가(장교)를 매년 100여명씩 육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민학교 졸업생 중 최고 영재를 뽑아 중학시절부터 전문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해커요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북한의 인터넷 정책은 현실세계와 같이 사이버공간도 지배하여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과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해외 및 국내 자생적 친북사이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체제선전, 대남혁명을 선전 선동하는 이중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대내적으로는 '광명'과 특수망인 '붉은검'(국가보안성) '방패'(국가안전보위부) '금별'(군) 등의 인트라넷(intranet)망을 별도로 구축하여 기술축적과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등에 개설한 친북 해외사이트를 이용해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체제홍보, 대미·대남 정보수집, 반미·반정부 투쟁의식 고취 등의 대남 사이버투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상품을 선전하는 상업용 사이트도 상당부분 대남혁명 선전매체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째, 북한은 친북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대남 사이버투쟁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통신', '조선신보', '평양타임즈', '조선인포뱅크', '실리은행',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특히 반제민전의 '구국전선' 사이트는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의 행동강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섯째, 친북 사이트 유형은 대남혁명 선전선동 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백두넷, 범민련, 범청학련, 민족통신, 통일여명), 사상 선전 사이트(주체사상, 통일학연구소, 우리민족강당), 체제 선전 사이트(조선통신, 조선신보, 내나라), 상업용 사이트(천리마, 코리아북센타, 려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와 국내 자생적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은 '자주·민주·통일' 투쟁 선전선동, 사이버 통일전선 형성, 대남·대미 정보수집, 간첩교신, 상징조작과 대남혁명 구호 선전선동 등의 대남사이버 투쟁을 통해 주체사상,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부자 찬양 선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전술 지지 선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화 선전, 북한의 역사관과 창작물 선전, 한·미 당국과 정책의 중상모략, 북한의 대남혁명 선전선동 내용의 동조나 지지 선전 등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일곱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사이버공간에서는 첫째로 주체사상, 북한체제의 우월성, 대남혁명전략전술, 반미·반정부투쟁 선전선동 등의 다양한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둘째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전파하기 위해서 기존 인터넷망과 자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로 친북운동권간 사이버 통신, 사이버 선전선동(대남혁명노선과 반미·반정부투쟁 등), 사이버 시위(국가기관 홈페이지), 사이버 폭력(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통령 비방), 사이버 테러(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등) 등 사이버 공격수단이 다양화되었다. 넷째로 국내 웹사이트에 친북관련 게시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로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은 정부당국의 친북 해외사이트 차단 조치와 친북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에 '반민족, 반민족, 반인권적' 망동으로 비방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다른 IP주소로 추가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거나 '프락시(proxy) 서버' 사용방법을 소개 선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덟째, 북한은 국내 인터넷 매체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내 친북반한세력의 행동강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할 뿐 아니라, 반미·반정부 관련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대남혁명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친북반한 의식화를 주도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의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북한은 사이버공간의 특징인 사용자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활용의 편리성, 확산의 신속성, 정보 조작과 축적의 편리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 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보안유지의 용이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 사이버 대남공작과 대남선전선동, 유언비어 살포를 통한 국론분열 조장, 역정보 누출, 정보교란 등 정교하고 다양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투쟁과 함께 보위(保衛)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북한은 친북 해외 및 국내 자생적 사이트를 활용해 대남 사이버투쟁을 강화하는 정국교란을 기도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비롯해 미군철수 및 미군기지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보안수사대·국정원·기무사)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 등을 선전 선동하는 대남 사이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의 지도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친북의식화 사업에도 주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인권시비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친북해외 사이트와 대남 사이버투쟁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관련 법령 보완과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과 신세대 네티즌에 맞는 안보의식 확산 및 지속적인 사이버 안보교육, 그리고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사이버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보안경찰의 업무 영역이 과거와 달리 산업보안, 테러, 탈북자관리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안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안조직의 확대, 보안인력 증원, 최첨단 과학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보안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보안사이버 수사요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임순경 확보, 전문 인력의 특별채용, 경학 협력체제 강구,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 사이버 수사기법의 현대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친북 해외사이트와 국내 친북관련 게시물 파악, 사이버 역공작, 친북 사이트에 동원되는 불순자금원 추적, 민간차원의 사이버감시망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북한 내부에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당국은 북한과의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도 중요한 안보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망을 통해 군사시설과 국가 기관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마비시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를 작동시키는 정보시스템과 정보가 외부의 사이버공격에 파괴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능력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전술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공간을 통해 반미·반정부 적개심 고취시키며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에 열을 올리며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성시키는 등 남한혁명역량의 강화를 기도하여 왔다. 친북 해외사이트나 국내 자생적 사이트를 통해 전개되는 사이버투쟁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혁명 선전선동 자료들이 사이버공간에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는 보안경찰의 중요한 업무 영역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보안경찰은 인터넷이 지니는 취약성을 찾아내고, 사이버안보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도발 행위도 제거하고 보호하는 사이버 치안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보안경찰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당국의 재인식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통한 보안역량을 제고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 위해 요인들을 공권력에 의해 모두 제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보위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할 때만이 북한의 어떠한 대남 사이버투쟁에도 국가안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아카데미, 2003.
김경동·이온죽,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1986.
김윤영, 『2006년 반제민전의 대남투쟁 노선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06.
_____,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범청학련 남측본부, 『청춘』 2005년 3월호, 범청학련남측본부, 2005.
양근원·장윤식, 『사이버범죄 수사론』, 경찰대학, 2008.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유영옥, 『북한학』, 학문사, 1996.
윤대규 외,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0.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장철현, 『北韓調査硏究』,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정 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련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2000.
『통일여명 1주년』, 통일여명편집국, 2001년 12월.
한상완 외,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

심으로』,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한영춘,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법문사, 1998.
합동참모본부, 『최근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상』, 합참심리전단, 20002.
합동참모본부 보고서, 『최근 對南 심리전 실태』, 2003.2.25.

나. 논문

강수동,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부경대석사논문, 2003.
고경민,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전략과 북한의 인터넷 개방 전망”,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김문선, “사이버테러의 대응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2006.
김흥광, “인터넷개방을 위한 북한의 로드맵과 추진현황”,『북한과학기술연구』 제5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_____, “북한의 사이버정보 실태”, 『북한』 2005년 5월호, 북한연구소.
_____, “북한의 IT 딜레마와 이중전략 -인터넷 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4권 제4호, 2007년 겨울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방부·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세미나, 2003년 4월 2일자.
김승호, “북한 대중투쟁 분석”,『공안연구』 통권 제80집, 공안문제연구소, 2003.10.
김우진, “현대 사이버전 양상과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국방 수행능력 향상방안 연구”, 중앙대석사논문, 2007.
김재근, “사이버테러 범죄수사를 위한 Forensics 기법 연구”, 한세대박사논문, 2006.

김학근, “군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사이버전사 양성방안”, 경희대석사논문, 2008.

김흥광, “북한의 사이버전 대응과 전략”,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박찬모,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수준과 남북 협력 방안”,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7.

선유정, “김정일시대의 과학기술중시사상”, 『북한과학기술연구』 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송승섭, “젊은층 공략하는 북의 인터넷 심리전 정책보완과 국민통합으로 대처”, 『북한』, 2003년 4호, 북한연구소, 2003.

_____, “북한의 대외용 인터넷 사이트 현황”, 『북한과학기술연구』 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자유민주연구』 제2월 2호, 2007.12.

윤요셉. “데이터베이스관리체계 ”광명“에 대한 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이미정·한승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국방연구』 제48권 제2호, 2005년 12월호,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

이윤규, “북한의 대남 심리전 연구 -대남전단 분석을 중심으로-”, 경남대박사논문, 2000.6.

이진환, “국가(공공)기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경남대석사논문, 2003.

전승필, “북한 인터넷 언론에 관한 연구”, 한남대석사논문, 2004.

정상훈,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공주대석사논문, 2007.

조덕원, “한민전의 기치는 우리의 열렬한 지향(주체의 총화)”, 『애국전선』 1993.11, 민족해방애국전선, 1993.

조인상, “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정훈교육 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구성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제35호,

2004.12.
주성진, “사이버테러의 실태와 사이버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2005.
최정님,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개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 직영, 친북인터넷 사이트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최현규 외, “<특집> 북한정보통신 지식정보: 북한의 인터넷과 웹사이트”, 『북한과학기술연구』 제3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하옥현, “사이버공간 보안의 현황과 대응방향, 『정보보호학회지』 제13권 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10.
황규용, “사이버범죄의 현실태와 경찰의 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연구”, 충남대석사논문, 2008.

2. 북한문헌

김주경, “우리나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조선문학』 1978년 9월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78.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1997년 3월 17일), 『김정일선집⑭』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김정일선집⑵』,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김정일선집⑺』,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김정일선집⑽』,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김정일 선집 ⑿』,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논설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 반제민전, 2008.4.26.
<민민전 방송>, 2003년 7월 29일자.
반제민전 대변인, “반제민전 대변인 1.25 논평”, 반제민전

(http://ndfsk.dyndns.org/main.htm), 2007년 1월 25일 검색.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시국선언”(구국전선: http://ndfsk.dyndns.org), 2008년 7월 4일 검색.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2)』, 사회과학출판사, 1992.

“시국선언”,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08.6.10.

신년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8.1.1.

<한민전>, 2002년 6월 25일자.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3. 기타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1999년 9월 29일자.

“국정원 ‘우리민족끼리’ 북 통전부 소속”, <연합뉴스>, 2005년 4월 23일자.

김필재, “'김父子 찬양·강정구 논문게재' 親北사이트 열리고 있다”, <KONAS net>(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7454, 2008년 6월 30일 검색), 2005년 10월 17일자.

<동아일보>, 2007년 9월 29일자.

문관현, “인터넷매체, 정부에 친북사이트 차단해제 촉구”, <연합뉴스>, 2006.4.26.

박진우, “체제 선전·해커부대… 北 ‘사이버 무기’로”, <세계일보>, 2007년 2월 12일자.

“북한 주체사상 변경가능”, <연합뉴스>, 2003년 10월 2일자

“북한 ‘해커부대’ 미 본토 전산망 위협”, <조선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북한 해커부대 운영”, MBC(www.imnews.com), 2006년 10월 29일자.

“소리없는 안보위협 사이버 전쟁”,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2008.
<연합뉴스>, 2004년 7월 20일자.
“인터넷 북찬양문서 3009건 최근 한달, 평소의 4배 게재 ”, <동아일보>, 2007년 2월 9일자.
“인터넷부터 赤化되고 있다”, 『월간조선』 2003년 4월호, 2003.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주간북한동향>(제654호, 2003.7.25-7.31), 통일원(http://www.unikorea.go.kr), 2003.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주간북한동향>제656호(2003.8.8-8.14), 통일원, 2003.8.18.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주간북한동향>제656호(2003.8.8-8.14), 통일원, 2003.8.18.
<조선일보>, 2002년 10월 22일자.
<주간북한주요동향일지>(2003.8.25-8.31), 국가정보원(http://www.allim.go.kr).
진보네트워크(http://www.jinbo.net), 참세상 게시판
“체제 선전·해커부대… 北 사이버 무기로”, <세계일보>, 2007년 2월 13일.
“통일여명 자료집 조회수”, 『통일여명 1주년』, 통일여명편집국, 2001년 12월.
통일원(http://www.unikorea.go.kr), 2003.
“해킹부대 군관이 군 최고보직 부상도”, <연합뉴스>, 2004년 5월 28일자.
http://www.nadrk.org/plus/board.php3?table=pds&query=view&l=2293&p=2&go=17), 2006.1.26일 검색.

책임연구보고서 2008-29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 안 정 책 연 구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